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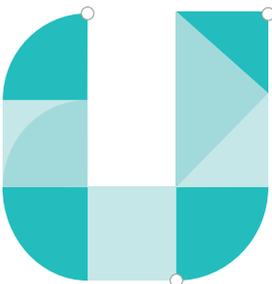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최장호 | 권 울 | 최유정 | 이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북한의 인구변동과
정책변화 분석(1/3년차)”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67-01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통일연구원
20-67-02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구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홍제환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 최지영 연구위원 김수경 연구위원
협력 연구기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최장호 연구위원	권 올 선임연구위원 최유정 전문연구위원 이대은 연구위원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연구책임자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유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67-02

북한의 인구변동과 정책변화 분석(1/3년차)

KINU 연구총서 20-23

발행일	2020년 12월 30일
저자	최장호, 권율, 최유정, 이대은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ISBN	979-11-6589-025-4 93340
가격	7,000원

© 통일연구원, 202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13
I.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7
II.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	29
1.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31
2.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	38
3. 인구구조 관리 정책	42
4. 소결	43
III.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45
1. 동유럽 체제전환의 유형과 특징	47
2. 동유럽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 및 서유럽 국가와의 비교	55
3. 동유럽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분석	69
4. 소결	81

IV. 동남아시아의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83
1. 동남아시아 체제전환의 유형과 특징	85
2.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 비교	96
3.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분석	108
4. 소결	114
V.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의 상관관계	117
1.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의 상관관계 분석	119
2.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 경제 통합에 대한 정책적 제언	130
참고문헌	135
부록: 회귀분석 결과	141
최근 발간자료 안내	147

표 차례

〈표 Ⅲ-1〉 주요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기간	50
〈표 Ⅲ-2〉 동유럽 국가의 초혼 연령	62
〈표 Ⅲ-3〉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순이민자 수 비교	68
〈표 Ⅲ-4〉 동유럽 주요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 추이	79
〈표 Ⅳ-1〉 동남아(CLMV) 국가들의 체제전환 기간	91
〈표 Ⅳ-2〉 동남아 주요 국가의 순이민자 수 비교	107
〈표 Ⅳ-3〉 체제전환국의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 추이	113
〈표 Ⅴ-1〉 동남아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실질) 1인당 GDP 변화 ...	119
〈표 Ⅴ-2〉 동남아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인구 변화 비교	121
〈표 부록-1〉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145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의 개념	27
〈그림 Ⅱ-1〉 전 세계 고령화 지수	33
〈그림 Ⅱ-2〉 전 세계 출생률과 사망률	34
〈그림 Ⅱ-3〉 출생률, 사망률, 인구의 상관관계	35
〈그림 Ⅱ-4〉 경제 규모에 따른 고령화 정도 비교	36
〈그림 Ⅱ-5〉 체제전환과 출생률의 변화	41
〈그림 Ⅲ-1〉 전환기 동유럽 국가들의 GDP 성장률	51
〈그림 Ⅲ-2〉 동유럽 주요 국가의 인플레이션	52
〈그림 Ⅲ-3〉 전환기 동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53
〈그림 Ⅲ-4〉 동유럽 주요 국가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56
〈그림 Ⅲ-5〉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의 인구 증가율 추이	59
〈그림 Ⅲ-6〉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출산율 비교	60
〈그림 Ⅲ-7〉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출생률 비교	61
〈그림 Ⅲ-8〉 동유럽(좌)과 구소련(우) 국가의 초산 연령	64
〈그림 Ⅲ-9〉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평균 출산 연령 비교	65
〈그림 Ⅲ-10〉 구소련·동유럽·서유럽 주요 국가의 사망률 비교	66
〈그림 Ⅲ-11〉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영아 사망률 비교	70
〈그림 Ⅲ-12〉 구소련·동유럽·서유럽 국가의 기대수명 추이	71
〈그림 Ⅲ-13〉 동유럽 국가의 실질 임금 평균	74
〈그림 Ⅲ-14〉 출산율과 교육 투자 수익률과의 상관관계	76

〈그림 Ⅲ-15〉 체제전환 전후 추가 교육 1년에 따른 수익률 변화	77
〈그림 Ⅲ-16〉 구소련·동유럽·서유럽 국가의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점유율 변화	78
〈그림 Ⅲ-17〉 동유럽 주요 국가의 노년 부양 비율	80
〈그림 Ⅲ-18〉 동유럽 주요 국가의 유소년 부양 비율	80
〈그림 Ⅳ-1〉 캄보디아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87
〈그림 Ⅳ-2〉 라오스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88
〈그림 Ⅳ-3〉 미얀마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89
〈그림 Ⅳ-4〉 베트남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90
〈그림 Ⅳ-5〉 동남아(CLMV) 국가들의 GDP 성장률	92
〈그림 Ⅳ-6〉 동남아(CLMV) 국가들의 1인당 GDP 성장률	93
〈그림 Ⅳ-7〉 동남아(CLMV)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94
〈그림 Ⅳ-8〉 동남아(CLMV) 국가들의 실업률	95
〈그림 Ⅳ-9〉 동남아(CLMV) 국가들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98
〈그림 Ⅳ-10〉 동남아 주요 국가의 인구 증가율 비교	100
〈그림 Ⅳ-1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비교	102
〈그림 Ⅳ-12〉 동남아 주요 국가의 출생률 비교	103
〈그림 Ⅳ-13〉 동남아 주요 국가의 초혼 평균 연령(남(上), 여(下))	104
〈그림 Ⅳ-14〉 동남아 주요 국가의 사망률 비교	106
〈그림 Ⅳ-15〉 동남아 주요 국가의 영아 사망률 비교	109

〈그림 IV-16〉 동남아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비교	109
〈그림 IV-17〉 동남아(CLMV) 국가들의 여학생(高) 등록률	111
〈그림 IV-18〉 동남아(CLMV) 국가들의 여성 서비스업 참여율	111
〈그림 IV-19〉 동남아 주요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점유율 변화	113
〈그림 IV-20〉 동남아 주요 국가의 노년부양비율 비교	114
〈그림 V-1〉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실질) 1인당 GDP 비교 ..	120
〈그림 V-2〉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 증가율 비교	122
〈그림 V-3〉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출생률 비교	124
〈그림 V-4〉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비교 ..	125
〈그림 V-5〉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유소년 부양 비율 비교 ..	126
〈그림 V-6〉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사망률 비교	127
〈그림 V-7〉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노령자 부양 비율 비교 ..	128
〈그림 V-8〉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순이민자 비중 비교	129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를 늦출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통합도 예상과 달리 남한 고령화를 4~5년 늦추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만약 체제전환이 북한의 고령화를 촉진하여 인구 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본 연구는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의 사례에서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북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으로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동남아 체제전환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의 출산율, 사망률, 순이민자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주로 1985~2010년이다.

먼저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구권 국가들의 인구구조는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체제전환 이후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인구가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구 피라미드가 방추형으로 변화하였다. 인구구조 악화 배경에는 실질임금 하락과 실업,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인 자유화에서 창출된 새로운 기회와 가치관의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원인도 있었다. 긍정·부정의 원인은 지역마다 다르게 영향을 미쳤는데, 동유럽의 인구구조는 새로운 기회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나, 구소련 국가들의 인구구조는 경제침체 및 실업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다음으로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변화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출산율과 출생률은 동유럽처럼 빠르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체제전환 이후에도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았다. 이는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나, 출산율 절대치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총 인구수는 증가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과 인구구조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구조는 경제규모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록 고령화가 촉진되었다. 둘째,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 고령화가 촉진되고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셋째,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가 고령화로 이어지는지는 실증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 다만 다수의 선행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가 고령화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넷째, 순이민자 수는 체제전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받았다.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체제전환이 북한의 고령화를 촉진하지 않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체제전환, 남북한 인구통합, 동유럽 인구구조, 동남아 인구구조, 고령화 사회

A study on the change of demographic structure in the process of economic transition

CHOI, Jangho et al.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facing an unprecedented fertility rate decline and a population aging crisis unlike any other country across the globe. Even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ould only delay population aging of South Korea for about four or five years. What would happen if the economic transition of North Korea would result in population aging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demographic structure?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case studies of countries in Europe and Southeast Asia. We attempt to determine the impact of an economic transition to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a population and deriv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We chose to focus on the birth rate, death rate, and net migration of Czech Republic, Poland, Estonia, Hungary, and Slovakia for European transition countries and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for Southeast Asia. Our period of analysis was from 1985 to 2010.

To begin with, we analyzed the change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Eastern European and Southeast Asian tran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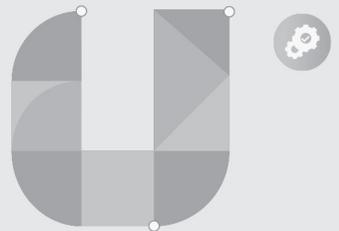
countries. Eastern Europe showed a deteriorating demographic structure after its economic transition. Birth rates fell rapidly and decreased the population, causing the population pyramid to shift to a contracting pyramid. Although there were negative aspects such as real income decline, unemployment, and changes social security, there were also positive aspects such as inception of new opportunities and values from newfound economic and political freedom.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affected regions differently. Eastern Europe's demographic structure had received a more positive influence such being able to seek newer opportunities. In contrast,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and its demographic structure had received a more negative influence, such as economic decline and unemployment.

In addition, we analyzed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nges of Southeast Asian transition countries. Although the birth rate and the fertility rate declined with similar rates as Eastern Europe, the overall population continued to increase and showed no signs of sudden deterioration after its transition. The economic transition had influenced the decline of the fertility rate, but the fertility rate was still large enough to increase the overall population. Therefore, we find that the changes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was a result of the combined effects of the economic transition and economic growth.

Lastly, we statisticall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transition and the demographic structure. Our findings are the following: First, the demographic structure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size the economy. Additional economic growth had promoted population aging. Second, economic transition brought population aging and declined fertility. Third, we were unable to prove that the proliferation of economic uncertainty led to population aging. However, multiple sources of literature showed that economic uncertainty could lead to population aging. Fourth, net migration received no impact from economic transition, but rather from socio-economic conditions. Reducing economic uncertainty and creating stable socio-economic conditions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could be one of the ways in which the economic transition does not accelerate population aging of North Korea.

Keywords: Transition Economy, Demograph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Demographic Structure of Eastern Europe, Demographic Structure of Southeast Asia, Aging Society.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출산율은 0.98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¹⁾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출산율 감소폭이 가장 큰 상황인데, 1987~2017년 동안 한국은 0.48명 감소, 일본은 0.26명 감소, 미국은 0.1명 감소한 반면, 프랑스는 0.06명 증가, 독일은 0.14명 증가하였다.²⁾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악화는 크게 생산가능인구 감소, 절대인구 감소,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증가 등 네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고령화로 노동생산성이 저하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절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맞물려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소멸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³⁾ 학령인구⁴⁾가 감소하여 학교, 보육원 등 교육인프라가 과잉 공급되고, 초·중고 및 대학 입학자 미충원이 확산되면서 교육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자원도 빠르게 감소하여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⁵⁾ 고령인구가 증가하여 노인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부상

1) 2018년 기준 2위는 몰타(Malta)로 1.2, 미국은 1.7, 일본은 1.4, OECD 평균은 1.6이 있음. 2019년 한국은 출산율 0.9를 기록하였음. OECD Data, <<http://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indicator-chart>> (Accessed October 8, 2020).

2) OECD Data를 활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OECD Data, <<http://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indicator-chart>> (Accessed October 8, 2020).

3) 이상림,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p. 123~128.

4) 학령인구는 초·중·고·대학교를 다니는 6~21세 인구를 말함.

5) 장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2019), p. 16.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지출 수요 증대와 세입규모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준(2019)은 인구고령화로 30년 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내외에 머물 것이며, 2050년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생산가능 인구)도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⁶⁾

우리 정부는 인구구조 악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⁷⁾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군 기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존 보병중심의 군 편제도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요양·돌봄 등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변화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중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에 단기간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 설사 단기에 출산율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해당 세대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편입되기까지는 최소한 15~2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남한경제는 단기간에 구조적인 변화로 인구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남북 경제통합 혹은 남북통일로 북한 인구나 남한 인구가 통합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2017)’과 ‘평화경제구상(2019)’을 발표하고 남북경제협력과 시장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의 생산가능인구를 활용하여 남한의 인구구조 악화를 개선할

6) 이재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9), p. 2.

7) 실제로 현재 외국인노동자(2018년 약 237만 명)가 부족한 노동력의 일부를 보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하는 상황임. 통계청, “연도별 체류 외국인,”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Accessed October 8, 2020).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남한의 인구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최지영(2017)⁸⁾을 들 수 있다. 최지영(2017)은 남북통일 시 상대적으로 젊은 북한 인구의 효과로 남한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4~5년 늦춰질 것이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북한도 이미 2004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출산율도 절대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fertility, 합계 출산율이 2.1명인 경우) 이하로 떨어졌으며,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으로 빠르게 수렴하면서 고령화 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것이 최지영(2017)의 전망이다.

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하다. 한반도 인구구조 변화는 남북통일은 물론 북한의 체제전환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두 개의 거대한 사건은 남북한, 특히 북한의 사회·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느냐가 북한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통일을 전후하여 북한의 체제전환도 불가피한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체제전환을 하느냐도 북한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한의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통일 방식뿐만 아니라, 체제전환 방식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는 북한 출산율이 남한 출산율로 수렴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경제·문화적인 동질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인구의 측면에서 동질화는 북한이 남한의 저출산율·저사망율을 따라올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지역

8) 최지영, “통일과 고령화,” 『경제연구』, 제2017-24호 (2017).

이 고유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장기간 유지하면서 북한 출산율의 남한으로의 수렴이 느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급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한 문화와 사회적 특성이 북한에 빠르게 이식되면서 북한의 출산율도 빠르게 남한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사회의 통합 속도가 북한 출산율이 남한으로 수렴하는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다. 북한이 체제전환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하면서 인구구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이 급격한 체제전환을 한다면 인구측면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나 남한으로부터 받는 영향의 폭이 커질 것이다.

동유럽의 경우, 체제전환 과정 중 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가 있을 정도로 체제전환이 인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유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하면서 비교적 단시간 내에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는데, 급격한 체제전환의 충격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입하였다. 체제전환의 영향으로 동유럽의 결혼율이나 출산율이 빠르게 서유럽 수준으로 수렴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⁹⁾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양적으로는 체제전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체제전환의 영향을 받았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체제전환 기간

9) Tomas Sobotka, "Re-Emerging Diversity: Rapid Fertility Chang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s," *Population(English Edition) 2003*, vol. 58, no. 4/5 (2003), pp. 477~478; Tomas Sobotka et al., "Czech Republic: A rapid transformation of fertility and family behaviour after the collapse of state socialism," *Demographic Research*, vol. 19, no. 14 (2008), pp. 434~436.

동안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배당효과¹⁰⁾를 경험하였다. 특히 중국은 인구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산아제한(한자녀)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기간 동안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다만, 출산율이 감소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높아 인구 전체는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최근 중국과 베트남은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인구역풍효과¹¹⁾를 우려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도 가까운 미래에 유사한 경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제전환 이후에 절대 인구가 감소한 동유럽 국가와 출산율은 감소하였으나 인구는 증가한 동남아 등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 경우여서 실제 북한의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이 복잡하다. 특히 동남아 체제전환을 인구구조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체제전환과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를 연계해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면서 주변국과 경제교류를 확대할수록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은 지형적으로 남한과 중국을 접경하고 있는데, 남한과 중국 모두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여 이들 국가와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영향을 받는 수준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체제전환을 할 경우 북한의 소득수준이 빠르게 증가할 것인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북한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0)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란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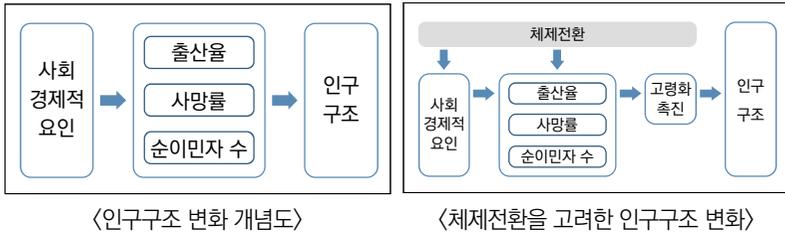
11) 인구역풍효과(demographic headwind)란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뜻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의 차이점은 비단 체제전환 자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상황, 문화 수준, 주변국의 상황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때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¹²⁾ 체제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북한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경제통합과 통일을 전제로 하였을 때,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는 남한 경제는 물론 인구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봄으로써 남북경제교류가 우리 경제가 처한 인구구조 악화 문제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인구구조는 출산율, 사망률, 순이민자 수의 영향을 받고, 출산율, 사망률, 순이민자 수는 사회경제적 요인, 즉 소득, 교육, 육아 비용, 문화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체제전환은 출산율과 사망률, 순이민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인구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12) “[현미경] 격리된 김에…전 세계 ‘코로나 베이비붐’ 오나,” 『조선일보』, 2020.4.11.,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1/2020041100141.html> (검색일: 2020.10.10.).

〈그림 1-1〉 연구의 개념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지역은 동유럽 체제전환국인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이며, 경우에 따라 다른 체제전환국을 고려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으로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주로 1985~2010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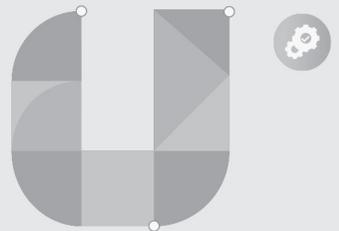
연구내용을 보면, 제Ⅱ장에서는 인구변화와 관련된 이론을 분석하고, 본 연구의 틀이 되는 가설 3가지를 제시하였다. 가설 3가지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체제전환 여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2) 경제 규모의 차이가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출산율과 사망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3) 체제전환은 순이민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동유럽 체제전환의 인구변화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동유럽 체제전환 유형의 특징과, 동유럽의 인구 관련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유럽 인구구조에 미친 일반적·사회적 요인을 검토하여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변화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도 먼저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을 살펴본 후, 동유럽의 인구 관련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남아 인구구조에 미친 일반적·사회적 요인을 검토하여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 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체제전환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체제전환과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졌다. 이는 단기적으로 유소년부양비(14세 이하 인구 ÷ 노동가능인구(15~64세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고령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인당 GDP의 증가는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크기는 무시할 수준으로 작았다. 경제규모(GDP)는 출생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많은 유럽지역 국가들의 출생률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 낮았으므로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체제전환은 이민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II.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



1.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인구구조는 전체 인구를 연령이나 특성에 따라 여러 집단(group)으로 분류한 뒤 각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구조는 전체 인구를 노동가능인구(15~64세)와 부양인구(1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로 구분한 뒤, 그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가능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양인구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축적한 자원을 소비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때는 고령화 지수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로 나눈 값을 사용한다.

인구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가 경제성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콥-더글라스 함수(Cobb-Douglas function)는 생산량 = $f(\text{노동, 자본}) = aL^\alpha K^\beta$ 의 함수 형태를 갖는데, 노동인구가 증가할수록 생산량(output)이 증가한다. 반대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둔화된다. Bloom(1998)과 Williamson(1998)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경제성장의 1/3은 인구 증가에 의한 효과이며,¹³⁾ Mason(2001)은 지역 경제 성장의 1/4은 인구 증가에 의한 효과라고 주장하였다.¹⁴⁾

13) David E. Bloom and Jeffrey G. Williamson,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2, no. 3 (1998), pp. 440~441.

14) Andrew Mason (ed.), *Population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challenges met, opportunities seized*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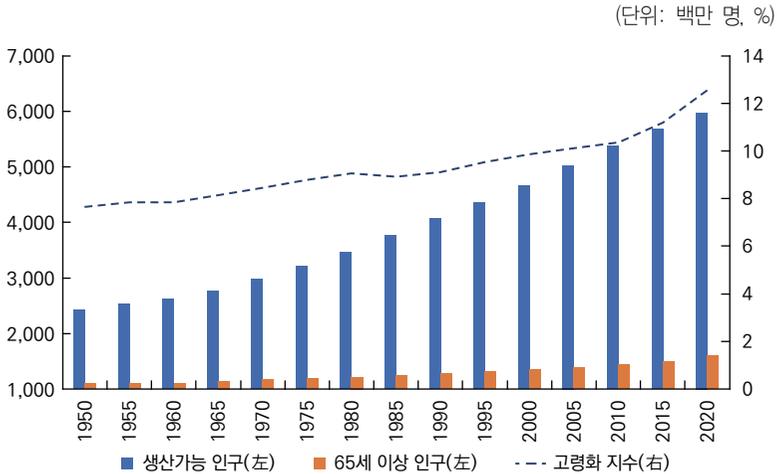
반대로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해져 국가 전체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 고령세대에 대한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고령세대에 대한 사회비용 증가가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인구,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 또는 인구보너스효과(demographic bonus)라고 한다. 반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출산율과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인구역풍효과(demographic headwind)라고 한다.

인류가 인구 고령화 문제를 경험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그림 II-1〉). 전 세계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1900년 16.5억 명 수준이던 전 세계 인구는 1965년 33.4억 명으로 2배가 되었으며 다시 2007년 67.1억 명으로 2배가 되었다.¹⁵⁾ 동시에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화 지수는 1950년 7.7%에서 1985년 9.0%로 35년 동안 1.3%p 증가한 반면, 다시 35년 뒤인 2020년에는 12.5%로 3.5%p 증가하였다. 고령화 속도가 점진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으로 1982년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가 개최되었고, 2002년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가 개최되었다.

15) 1900년 세계 인구: 미국 통계청 인구 자료, 〈<http://www.census.gov/data/tables/time-series/demo/international-programs/historical-est-worldpop.html>〉 (Accessed October 11, 2020); 1965년, 2007년 세계 인구: UN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이 제공하는 자료 중 Total Population-Both Sexes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http://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Population/>〉 (Accessed October 11, 2020).

〈그림 II-1〉 전 세계 고령화 지수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가 제공하는 자료 중 Population by Age Groups - Both Sexes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http://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Population/>> (Accessed October 11,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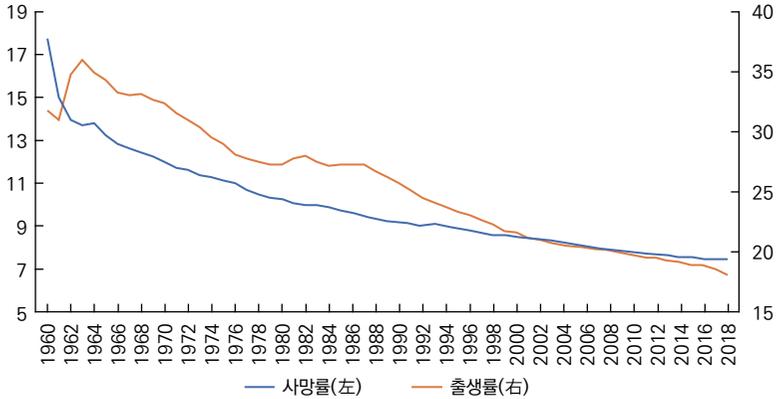
전 세계 인구는 출산율, 사망률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 인구는 여기에 순이민자 수를 추가로 고려한다(〈그림 II-2〉). 전 세계의 인구고령화는 사망률 감소(기대수명의 증가), 출산율 감소,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가 원인이다. 기대수명은 1950년 47세에서 2015년 73.2세로 약 26세 증가하였다.¹⁶⁾ 출산율(fertility rate)은 1960년 31.8명에서 2015년 19.0명으로 약 12.8명 감소하였다.¹⁷⁾ 베이비 붐 세대(1946~1964년에 태어난 세대)의 고령화 진입으로 고령화가 급진전 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월등하게 인구가 많다.

16) Worldometer, <<http://www.worldometers.info/demographics/life-expectancy/>> (Accessed October 11, 2020).

17) 인구 1,000명당 출산율(fertility rat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11, 2020).

〈그림 II-2〉 전 세계 출생률과 사망률

(단위: 1,000명당 인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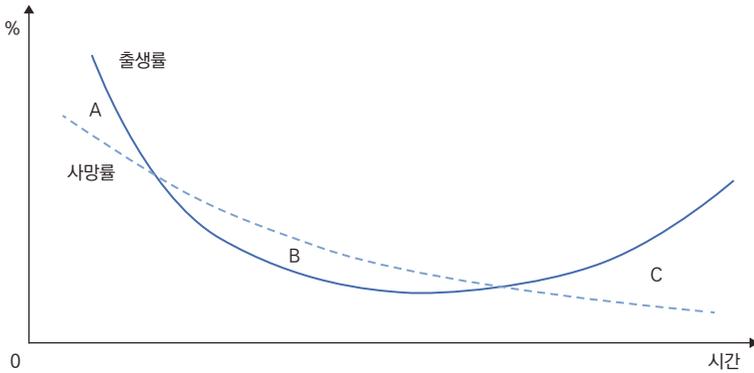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11, 2020).

출생률과 사망률, 인구의 관계를 개념화하면 〈그림 II-3〉과 같다.¹⁸⁾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이 증가하며, 보건환경이 개선되고, 영양이 풍부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로 인하여 출생률(그림에서는 직선)이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된다. 반면 사망률(그림에서는 점선)은 출생률과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구간(A, C)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나, 반대로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은 구간(B)에서는 인구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A구간에서 B구간으로 이동할수록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A구간은 고출생률과 고사망률이, B구간은 저출생률과 저사망률이 특징이다.

18) Andrew Mas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Demographic dividend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2005), pp. 82~85; Xing Li, Zeguang Li, and Man-Wah Luke Chan, "Demographic Change, Savings,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e Chinese Economy*, vol. 45, no. 2 (2012), pp. 7~10.

〈그림 II-3〉 출생률, 사망률, 인구의 상관관계



자료: Andrew Mas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Demographic dividend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2005), pp. 82~85; Xing Li, Zeguang Li, and Man-Wah Luke Chan, "Demographic Change, Savings,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e Chinese Economy*, vol. 45, no. 2 (2012), pp. 7~10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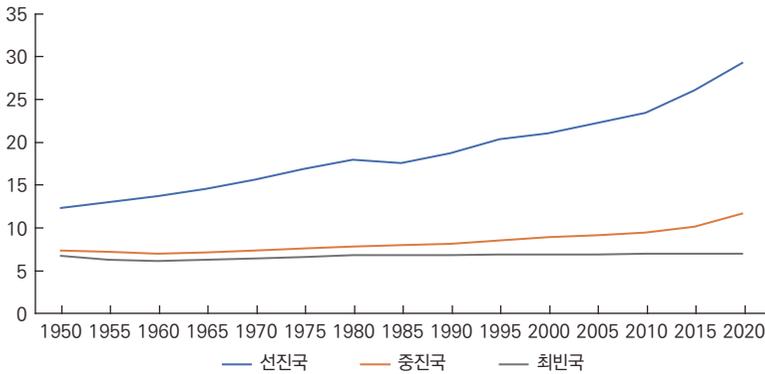
고령화 정도는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력 규모가 큰 선진국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반면, 경제 규모가 작은 최빈국은 고령화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고령화 지수가 선진국(More developed country)은 1950년 11.9, 1985년 17.5, 2020년 30.0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최빈국은 1950년 5.9, 1985년 5.9, 2020년 6.2로 거의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령화가 경제 규모(소득수준)¹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인구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고전적인 이론은 인구현대화이론(Demographic Modernization Theory)이다.²⁰⁾ 이 이론은 일반적인

19) 본 연구에서는 경제 규모의 차이로 선진국, 중진국, 최빈국이 구분된다고 보았음. 경제 규모 소득수준의 차이로 이해하여도 본 연구의 논의를 깨지 않음.

20) Agostino Ferrara, Luca Salvati, Claudia Becagli, and Giada Bertini, "Beyond the Modernization Theory: Socio-Demographic Changes, Economic Structure and Forest Transition in a Multi-Dimensional Time-Series Analysis for Italy,"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 no. 11 (2014), pp. 183~184.

〈그림 II-4〉 경제 규모에 따른 고령화 정도 비교



자료: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가 제공하는 자료 중 Population by Age Groups-Both Sexes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 (<http://population.un.org/wpp/Download/Standard/Population/>) (Accessed October 11, 2020).

로 경제 환경이 최빈국 → 개발도상국 → 중진국 → 선진국 순서로 발전하며, 장기적으로 선진국에 수렴하므로, 인구구조도 선진국의 인구구조로 수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저출산과 저사망, 인구감소의 특징을 갖는다. 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발달하였던 이론이나, 1970~2000년대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론의 현실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현대화이론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력을 얻었다.

현재 주류는 인구전환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이다. 이 이론은 인구현대화이론을 발전시켜 어떠한 요인들이 고령화를 야기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성장할수록 가족 규모가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축소되고 출산율과 사망률이 감소한다. 사망률이 감소하는 이유와 정책방안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영양이 좋아지고 보건환경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하락한다. 인구증가와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유인이 없기 때문에 고령화와 인구증가 문제를 다룰 때는 대부분 출산율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일차적으로 출산율은 결혼·양육의 기회비용과 반비례 관계인 것으로 본다. 결혼·양육의 기회비용은 여성의 임금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가족 규모가 작아지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자녀는 정상재여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를 많이 출산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득의 증가는 자녀 양육으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²¹⁾ 또한, 자녀의 수와 양육의 질은 교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녀를 소수만 낳고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더 큰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늘어난 소득으로 보다 양질의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규모가 커질수록 출산율 감소의 유인이 커지게 된다.

결혼·양육의 기회비용 외에도 소득, 고용여건(실업률), 가정 내 가사 분담, 여성의 교육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중 여성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교육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할수록 결혼하는 연령이 늦어져 만혼이 확산되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²²⁾

21) Gary Becker,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p. 40~42.

22) U. O. Osili and B. T. Long, "Does Female Schooling Reduce Fertility? Evidence from Nigeri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7, no. 1 (2008), p. 73; B. Perelli-Harris, "The Path to Lowest-Low Fertility in Ukraine," *Population Studies*, vol. 59, no. 1 (2005), pp. 63~65; S. Klasen and A. Launov,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Decline in the Czech Republic,"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9, no. 1 (2006), pp. 37~44.

2.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도 상술한 인구현대화이론과 인구전환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인구현대화이론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도 체제전환을 할수록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현상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체제전환을 할 경우, 경제를 개방하면서 국제사회와 교류가 잦아지고 그에 따라 소득수준도 빠르게 개선된다. 동시에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이 체제전환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유럽의 국가들이 체제전환 이후에 빠르게 출산율이 하락하고 인구고령화를 경험하였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체제전환 시 인구전환이론에서 주목한 출산율과 사망률도 변화하게 된다. 동유럽과 소련연방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함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²³⁾ 주요 원인으로는 체제전환으로 국영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파산하면서 증가한 실업에 대한 불확실성,²⁴⁾ 여성에 대한 교육 기회가 늘어나면서 확산된 만혼과 높아진 첫아이 출산 연령이 꼽힌다.

일시적이기는 하나 사망률도 증가하였다. 특히 동유럽에서는 체제전환 이후 중년남성의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 주로 심혈관계 질환이 관찰되었는데, 체제전환의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²⁵⁾

23) Elizabeth Brainerd,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Countries: Causes, Consequences, and Questions," *Economies in Transition*, WIDER Working Paper Series wp-2010-015 (2010), pp. 57~59.

24) S. K. Bhaumik and J. B. Nugent, "Does Economic Uncertainty Affect the Decision to Bear Children? Evidence from East and West Germany," IZA Discussion Paper, no. 1746, (2005), pp. 14~16.

25) Elizabeth Brainerd,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Countries: Causes, Consequences, and Questions," pp. 72~75.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순이민자 수도 고려해야 한다. 동유럽과 서유럽의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이동과 이민의 자유를 허용하였고, 그 결과 다수의 20~30대 고학력 노동자가 서유럽으로 이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유럽에서 20~30대 인구가 감소하였는데, 규모가 작은 국가는 순이민자의 급증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사례는 예외적이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동유럽과 달리 체제전환 기간 동안 인구가 증가하였고 출산율이나 사망률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동남아 국가도 체제전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출산율이 대체출산율(2.1)을 상회하는 수준 이어서 체제전환의 영향이 동유럽의 인구감소처럼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들은 체제전환 기간인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았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수십 년 내에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속도가 느렸을 뿐 동남아 체제전환국도 결국에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은 동유럽과 동남아의 체제전환 국가를 중심으로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가설 1) 동유럽과 동남아의 경제 규모 차이가 체제전환국의 출산율과 사망률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둘째, (가설 2) 동유럽과 동남아의 고령화(출산율 저하²⁶⁾)가 촉진

26) 고령화 현상은 먼저 출산율과 사망률 하락이 이루어진 뒤, 20~30년 뒤에 나타나는 현상임.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지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 ÷ '15~64세 생산가능인구 수'로 산출하였으므로, 출생한 이후에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기까지 최소 15년의

되었을 것이다. 체제전환이 반드시 고령화나 인구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충분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인구구조가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 체제전환기간 동안 정책적인 후순위로 밀리거나, 일반적으로 급격한 체제전환은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크지 않아 정책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셋째, (가설 3) 급격한 체제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순이민자 수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다.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로 젊은 층이 이주해 가면서 체제전환 이후 다수의 이민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체제전환국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였을 것이다.

가설 1과 관련하여서 체제전환국의 초기 조건과 정부 정책이 경제성장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⁷⁾ 인구구조의 변화 방향도 체제전환국의 초기 조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림 II-4>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도 차이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도 더 진전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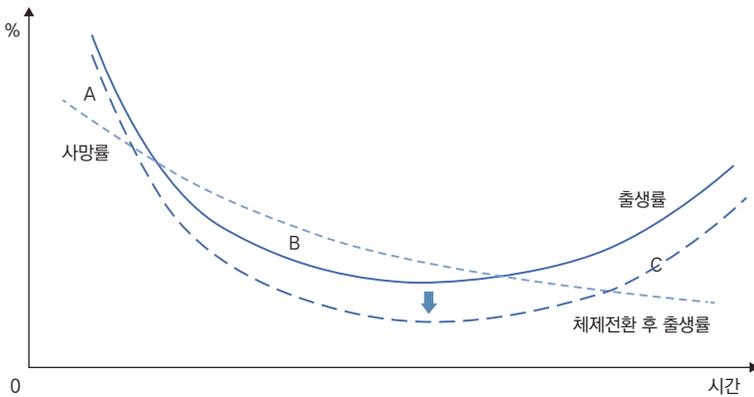
가설 2와 관련하여서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 확대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실제로 소득의

시간이 필요함. 때문에 고령화의 전조 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출산율 저하임.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를 동일한 맥락에서 사용하였음.

27) Cevdet Denizer, Alan Gelb, Stoyan Tenev, and Marthat de Melo, "Circumstance and choice: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1866, The World Bank (1997), pp. 3~15; Elisabetta Falchetti, Martin Raiser, and Peter Sanfey, "Defying the Odds: Initial Conditions, Reforms, and Growth in the First Decade of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0, no. 2 (2002), pp. 235~243.

불확실성 가중이 출산을 저하로 이어졌다는 실증 연구²⁸⁾와 고용시장의 변동성 가중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가 출산을 저하로 이어졌다는 실증 연구,²⁹⁾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20세기 출산율 사이클을 만들었다는 실증 연구³⁰⁾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II-5>와 같다.

<그림 II-5> 체제전환과 출생률의 변화



자료: Andrew Mas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Demographic dividend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2005); Xing Li, Zeguang Li, and Man-Wah Luke Chan, "Demographic Change, Savings,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e Chinese Economy*, vol. 45, no. 2 (20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28) Priya Ranjan, "Fertility Behaviour under Income Uncertaint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15, no. 1 (1999), p. 41.

29) George Hondroyiannis, "Fertility Determinants and Economic Uncertainty: An Assessment Using European Panel Data,"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31, no. 1 (2010), p. 47.

30) Bastien Chabé-Ferret and Paula Eugenia Gobbi, "Economics Uncertainty and Fertility Cycles: The Case of the Post-WWII Baby Boom," *ECARES Working Papers*, no. 2018-19 (2018), pp. 13-18.

3. 인구구조 관리 정책

상술한 바와 같이 초기 조건과 정부 정책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역시 초기 조건과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인구구조 악화에 대한 정부 정책은 크게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저출산 정책과 사망률 하락으로 인한 고령화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북유럽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가정 내에서 가사 부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남녀 평등한 문화를 확산시켰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출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였으며, 양육과 다자녀 주거 혜택도 지원하였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정년 연장, 여성의 노동 참여 유도, 외국인 노동자 유인 정책 시행, 이민 유입 장려, 자동화와 무인화 유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대량 이민 유입과 외국인 노동자 유인은 자국민의 정치·사회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사망률 하락으로 인한 고령층 증가에 대응한 정책은 연금제도 확충을 꼽을 수 있다. 공적연금(기초연금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민간연금도 활성화하고, 동시에 연금의 보장성을 확대한다. 다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거나 연금 기여율(납입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실버 취업 및 직업교육 등의 제도도 시행한다.

그러나 체제전환국이 체제 이행을 하면서 현재 주요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구구조는 중장

기적 영향이 강하나,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약하다. 이런 경우 체제이행 과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에 밀려 인구정책은 후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체제전환국의 정책 방안은 기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체제 이행으로 다른 분야에서 정책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출산을 관리를 위해 정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실질 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출산을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어느 정도 체제 이행과정이 안정된 이후에 상술한 인구구조 악화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5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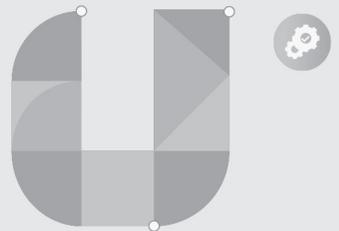
4. 소결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출산율과 사망률의 영향을 받으며, 지역 단위에서는 순이민자 수가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는데, 여기에는 영양 개선과 보건환경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도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주로 결혼·양육비용, 여성의 임금, 교육 수준, 소가족으로의 가족 규모의 변화, 소득수준, 여성의 고용여건, 가정 내 가사 분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순이민자 수의 변화는 체제전환 이후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민이 허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웃 국가로 20~30

대 고학력층이 대거 이동하면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할 때에도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 경제 규모의 차이가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출산율과 사망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2) 체제전환으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령화(출산율 저하) 속도가 더욱 빨라졌을 것이다. (가설 3) 급격한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순이민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가설 1~3과 관련해서는 제Ⅲ~Ⅴ장에서 통계 분석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III.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체제전환의 유형에 따라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달라진다. 체제전환의 유형은 개혁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 급진주의(radicalism)와 점진주의(gradualism)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동유럽 국가,³¹⁾ 후자는 중국과 베트남 등 동아시아 체제전환 국가들을 일컫는데, 급진적 체제전환은 점진적 체제전환에 비해 단기간에 더 큰 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한다. 이는 점진적 체제전환을 선택한 국가들은 애초에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한 정책 목적으로 두기 때문이다. 동유럽 사례를 살펴보면 급진적 체제전환 국가가 경험한 경제·사회적 혼란은 해당 국가의 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급진적인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정책의 특징과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양상과 특징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에서 체제전환이 인구구조 변화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한다.

1. 동유럽 체제전환의 유형과 특징

1980년대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경제난에 직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 구소련의 붕괴와 같은 사건은 체제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계획경제가 야기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인센티브 부재는 경제 활동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어렵게 하였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제한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하였으며, 경제 계획 지표 완화, 기업 권한 강화, 인센

31) 지리적으로 동유럽 국가는 유럽 동부 지역을 지칭한다. 그러나 체제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동유럽은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유럽국가, 즉 동구권을 지칭한다.

티브제도 도입 등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동·서독이 통일되고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동구권 국가들은 급작스럽게 체제전환을 시작하였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서기장에 취임한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혁 정책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를 촉발시키고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붕괴하였으며, 1992년 1월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동구권에서의 사회주의는 막을 내렸다.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경제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국가의 경제 체제전환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급진적인 경제 개혁 정책인 충격요법(shock therapy)을 기반으로 한다.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할 당시 IMF, 세계은행, EBRD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시장 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들 경제가 나아가야 할 경제 모델로 제안하였다.³²⁾ 이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동구권 국가들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들 국가의 개혁 모델은 경제 안정화(stabilization) 정책을 우선시하고 민영화(privatization)와 시장 자유화에 방점을 둔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³³⁾ 국

32) IMF, 세계은행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와 서방의 시장 경제 체제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개발 자원, 융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급진적 경제 프로그램 이행이 요구되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윌리엄슨(Williamson)이 제안하였으며, 경제 자유화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33) Olivier Jean Blanchard, Kenneth A. Froot, and Jeffrey D. Sachs,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1; 이형석, “동유럽 체제전환의 對韓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2018-33호 (2018), p. 3.

가별로 세부 정책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임금과 가격 자유화, 무역 자유화, 민영화, 조세 제도 및 법제 개편 등이 주요 개혁 조치였다.

동유럽의 정치적 체제전환은 기본적으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민주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도 세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크게 구분하면 ① 공산당의 자발적 개혁, ② 공산정권과 시민혁명 세력 간의 타협, ③ 급진혁명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집권 세력이 주도적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한 헝가리와 불가리아 같은 경우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집권세력과 시민세력의 합의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사례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국민의 집단 시위)와 알바니아(집단 망명 및 체제이탈), 그리고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인한 급진통일을 경험한 독일 등의 국가가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국가들은 세 번째 유형에 비해 비교적 평화적인 정치 체제전환을 맞이하였다.

한편, 동유럽의 경제적 체제전환은 국가별로 속도와 개혁의 범위가 상이하긴 하나 기본적으로 정치 민주화와 함께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했다는 측면에서 점진적 개혁의 성격을 띠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동유럽의 체제전환 기간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유럽 국가들이 WTO 혹은 EU에 가입한 연도까지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1989년 전후 체제전환을 시작하여, 1995년 WTO에 가입하였으며(에스토니아는 1999년), 2004년 EU 가입(루마니아는 2007년, 알바니아는 협상 중임)까지는 약 15년이 소요되었다. WTO 가입을 기점으로 하면 평균 약 7년, EU 가입을 기점으로 하면 평균 약 16년이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남아의 체

체제전환이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상이한 점이다.

〈표 Ⅲ-1〉 주요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기간

	루마니아	알바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체제전환	1989	1991	1989	1991	1989	1989	1990
WTO 가입	1995	2000	1995	1999	1995	1995	1995
EU 가입	2007	협상 중	2004	2004	2004	2004	2004
전환기간	7~19년	10년+	7~16년	9~14년	7~16년	7~16년	6~16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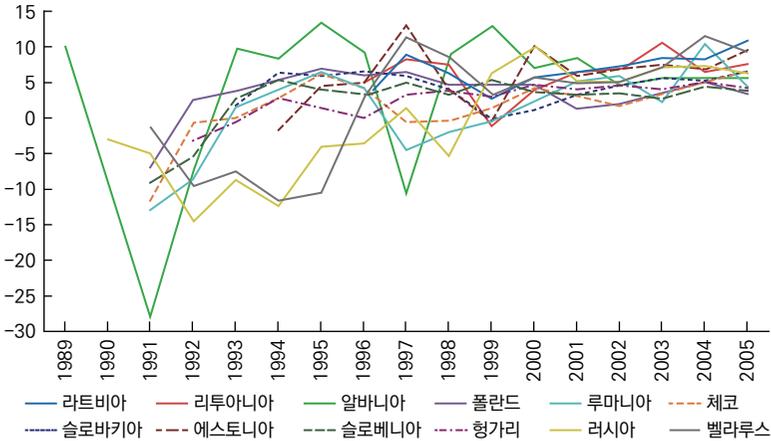
급진적인 경제 개혁 정책은 단기적으로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다. 1990년대 초반 이들 국가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재정 악화와 무역 수지 적자 등 ‘전환기 불황’을 경험하였으며³⁴⁾ 이로 인해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경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하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이들 국가가 경험한 체제전환기 경제·사회적 혼란을 정량적으로 살펴본다.

〈그림 Ⅲ-1〉은 체제전환기 1989~2005년 동유럽 국가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데, 체제전환 초기(짧게는 1990년대 초반, 길게는 1990년대 중후반) 동유럽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와 같은 일부 국가의 경우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통계치는 체제전환이 이들 국가 경제의 양적 성장에 단기적이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34) 김민관,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전환 과정: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중심으로,” 『산은조사월보』, 2007년 2월호 (2007), pp. 12~18.

〈그림 Ⅲ-1〉 전환기 동유럽 국가들의 GDP 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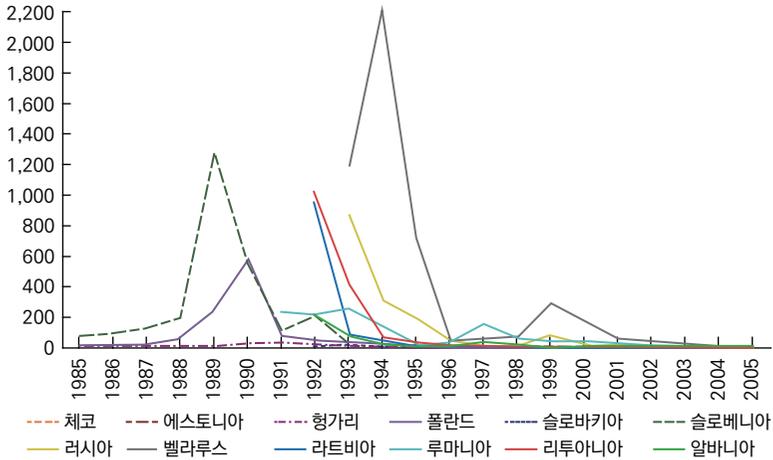
주: GDP growth (annual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September 27, 2020).

체제전환 초기 동유럽 주요 국가들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을 경험하였다. 전면적인 가격자유화는 체제전환 초기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였다. 〈그림 Ⅲ-2〉를 살펴보면,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의 체제전환 초기 인플레이션이 1,000%에 육박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1994년 벨라루스의 인플레이션은 2,200%를 상회한다. 초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국가는 긴축 정책, 환율 인상, 보조금 삭감, 세수 인상 등의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정책의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한 속도로 나타났지만, 2000년대에 진입하고 나서야 벨라루스를 제외한 국가의 인플레이션의 평균이 10%대에 진입하였다. 충격 요법을 통한 경제 안정화 정책은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률 축소와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2〉 동유럽 주요 국가의 인플레이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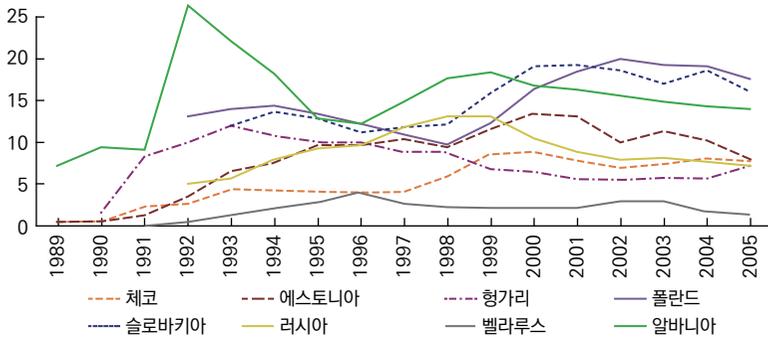
주: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 자유화는 실업 문제를 심화시켰다. 가격 자유화와 함께 생산 보조금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생산 비용의 상승은 공급 감소를 야기하였다. 〈그림 Ⅲ-3〉은 동유럽 주요 체제 전환 국가들의 실업률을 보여주는데, 체제전환 초기(1991~1994년) 이들 국가의 실업률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극심한 변화를 보이는 국가는 알바니아인데, 1991년 9.1%였던 실업률이 1992년 26.5%로 급상승한 이후 다소 안정화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였다. 에스토니아와 러시아의 실업률은 1990년대 비교적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헝가리와 벨라루스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안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급격한 실업률 상승은 개혁 초기 생산 감소와 구조 조정 과정에서의 대량 해고와 같은 고용 축소에서 비롯되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미진한 고용확대 정책 또한 한 가지

원인으로 제시된다.³⁵⁾ 이들 국가가 체제전환 초기 경험한 초인플레이션과 고용 불안은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혼란과 미래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

〈그림 III-3〉 전환기 동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주: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national estimat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September 27, 2020).

다음 절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인해 겪은 갑작스러운 사회·경제적 변화와 혼란이 이들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³⁶⁾ 사례 연구 대상 국가로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전쟁과 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는 모두 급진적 체제전환을 경험하였으나, 그중에서도 빠른 개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험한 국가

35) 이은구,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 56.

36) Franz Rothenbacher(2013)은 소련의 붕괴는 '인구 혁명'을 야기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Franz rothenbacher,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Population since 1850*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3), p. 547.

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de Melo et al.(1996)³⁷⁾은 누적자유화 지수(Cumulative liberalization index)를 제시하고 개혁의 속도에 따라 체제전환 국가를 구분하였는데, 슬로베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등을 빠른 개혁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Sachs et al.(2000)³⁸⁾은 체제전환 속도에 따라 국가를 분류하였는데 즉각적이고 빠른 체제전환 정책을 이행한 국가로 동독, 알바니아,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상기 문헌을 바탕으로 급격한 체제전환을 경험한 국가 중에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을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는 전쟁 또는 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체제전환 이전의 통계를 구하기가 어렵고, 특히 구소련 국가의 경우 독립된 통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체제전환 전후의 상황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하여 풍부한 사례 검토를 위해 필요시 다른 동구권 국가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인구구조를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주요 서유럽 국가와 비교하였다. 서유럽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독일을 포함하지만, 체제전환 연구에서 독일은 체제전환국의 특징과 서유럽 국가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37) Martha de Melo, Cevdet Denizer, and Alan Gelb, "From Plan to Market: Patterns of Transi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564,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Washington, D.C. Processed (1996).

38) J. Sachs, C. Zinnes and Y. Eilat,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Economic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1990-1998," Systemic Transformation in Transition Economie, I, CAER II Discussion Paper 61 (2000).

2. 동유럽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 및 서유럽 국가와의 비교

선행연구들은 동유럽 국가가 체제전환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초혼과 초산 연령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서유럽 국가의 인구구조와 유사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고 평가한다.³⁹⁾ 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관련 통계를 살펴보았다.

가.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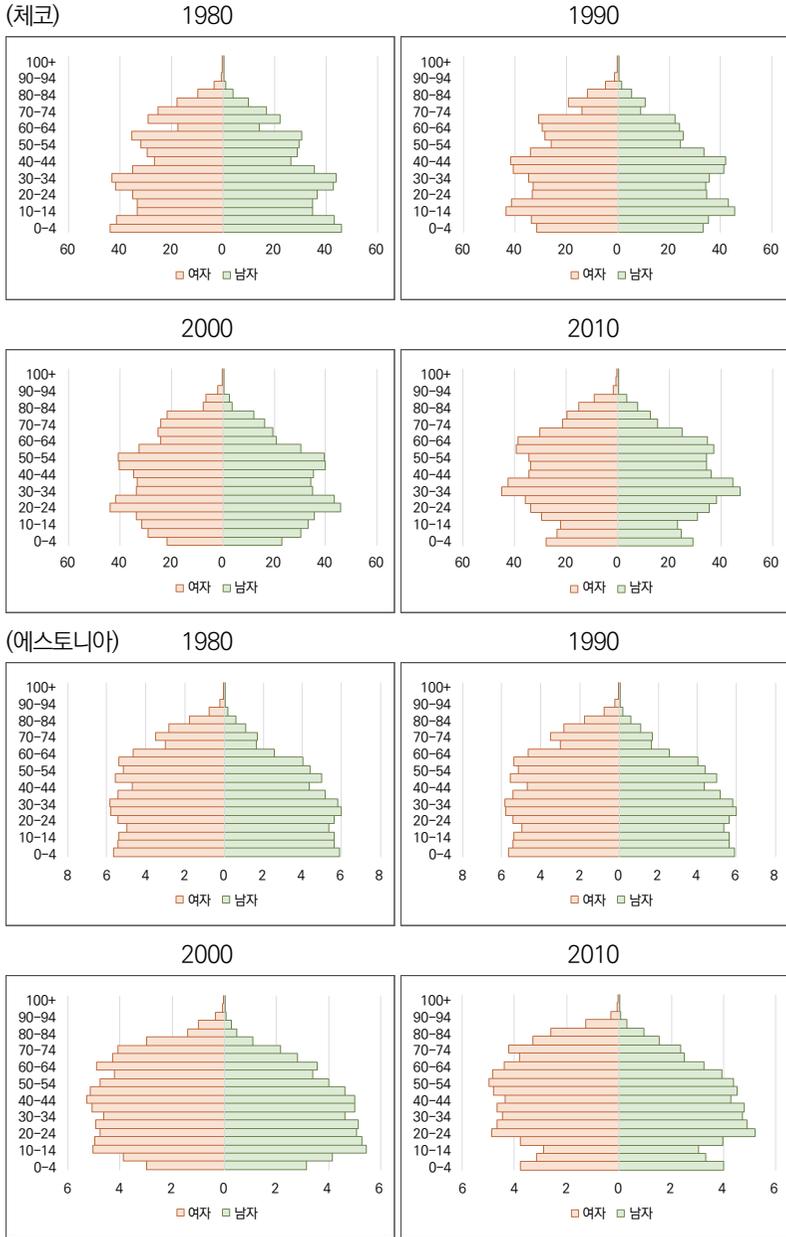
1990년 이전 동유럽 국가의 인구피라미드는 피라미드형과 종형이었으나, 1990년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방추형으로 변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구피라미드는 피라미드형(인구증가형), 종형(인구 정체형), 방추형(인구감소형)으로 나타나며, 인구 전출입에 따라 별형(전입형)과 표주박형(전출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피라미드형은 주로 후진·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며, 방추형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은 일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연구 대상 국가 중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나라들은 체제전환 이전 이미 종형의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출생률이 감소함에 따라 젊은 인구가 감소하여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출생률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를 겪지 않았는데 이는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층의 사망률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체제전환 이후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체코와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기 동안 인구 감소를 겪지 않았다.

39) Elizabeth Brainerd,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Countries: Causes, Consequences, and Questions,"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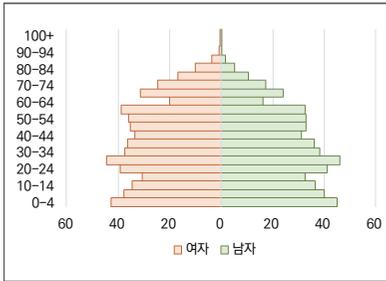
〈그림 III-4〉 동유럽 주요 국가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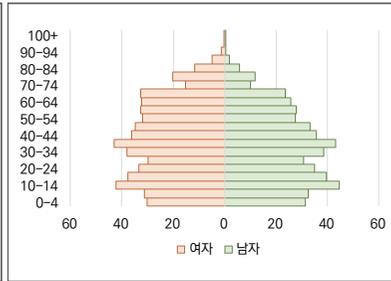


(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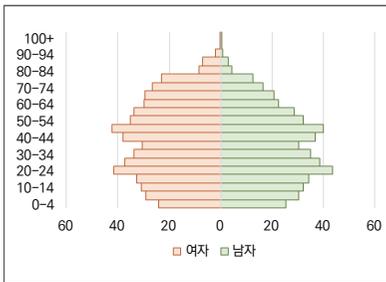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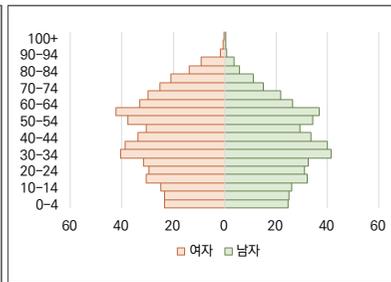
199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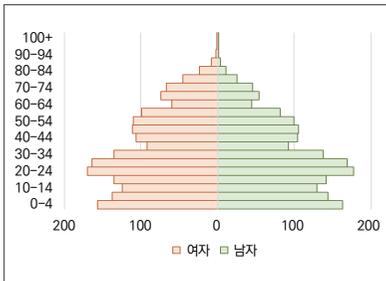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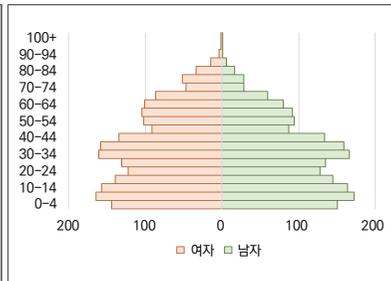


(폴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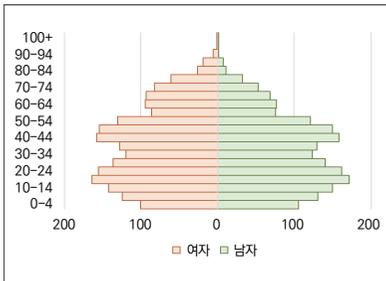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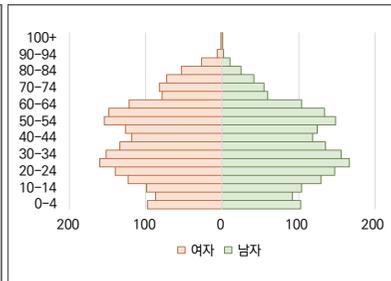
199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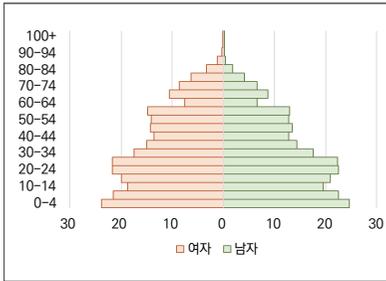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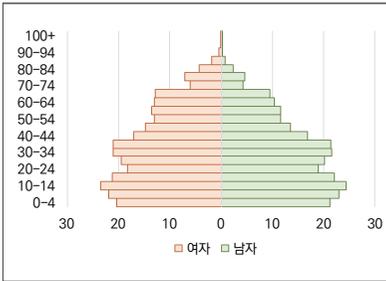


(슬로바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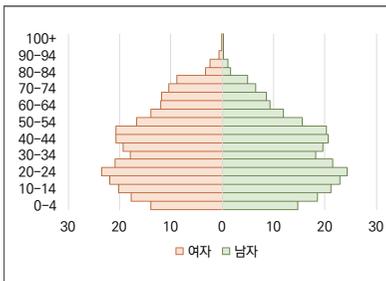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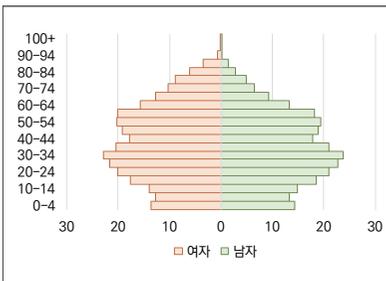
1990



200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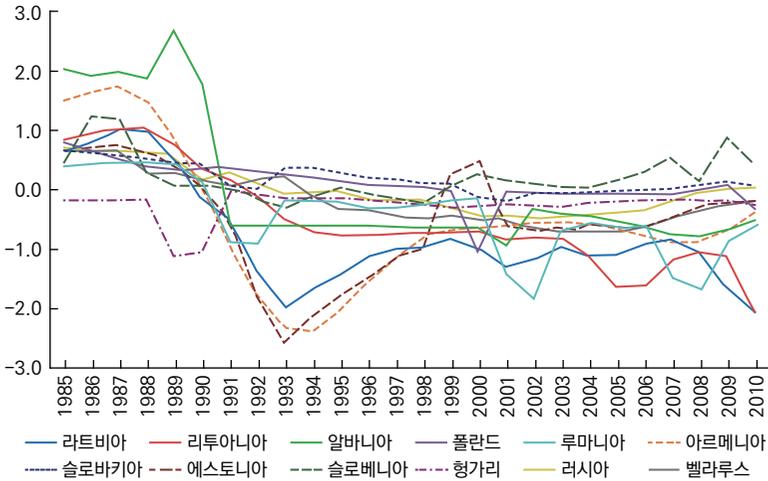
자료: Population Pyramid, <<http://www.populationpyramid.net/>> (Accessed July 5, 2020).

나. 인구 증가율

일부 국가를 제외한 동유럽과 구소련은 1990년을 전후로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출산율의 하락과 이민의 증가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구소련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Ⅲ-5>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인구 증가율은 1%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이들 중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도 존재한다. 한편,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의 인구 증가율은 1990년 이전 이미 0.5%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으며, 등락을 거쳐 현재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다만 스페인의 경우 이민자 수가 급증하여 2000년대 인구 증가율이 1.5%를 상회하는 경험을 하였다.

〈그림 Ⅲ-5〉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의 인구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인구 증가율(Population Growth)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다. 출산율과 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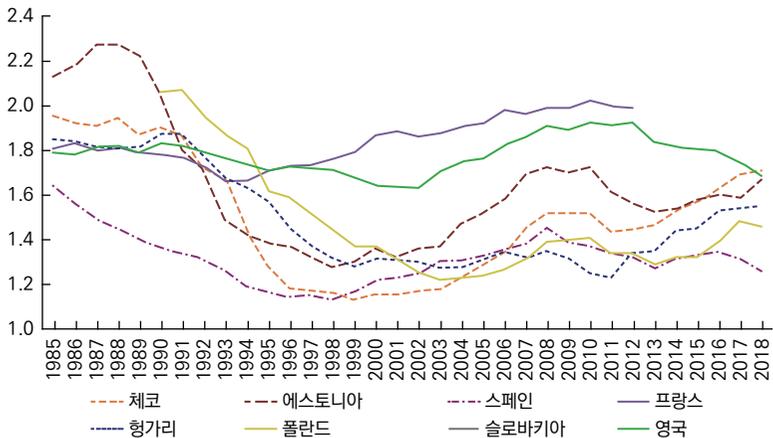
구소련 국가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1990~2000년 사이 출산율과 출생률 급감을 경험하였다.⁴⁰⁾ 〈그림 Ⅲ-6〉을 보면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1989년을 전후로 급속도로 감소하여 체제전환 안정기라고 볼 수 있는 200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야 회복세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많은 체제전환 국가들의 출산율이 2명 이하로 급감하였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1980년대 평균 2.16명 출산율을 보이다가 1999년에 이르러서는 1.30명까지 하락하였다.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도 1980년대 평균 2.22명에서

40) 출산율(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예측치)를 뜻하며, 출생률(birth rate)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아이 수를 뜻함.

1.33명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대체 출산율(Replacement Fertility Rate)⁴¹⁾을 한참 하회하는 수준이다.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 3국은 체제전환 초기 이미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 서유럽과 문화가 유사하다는 측면에서,⁴²⁾ 문화적 이질성과 상관없이 체제전환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시기 스페인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 이미 1.8명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그림 Ⅲ-6〉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출산율 비교

(단위: 여성 1인당 출산율, 명)



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함.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 (Accessed July 2, 2020).

체제전환 초기 출생률 통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Ⅲ-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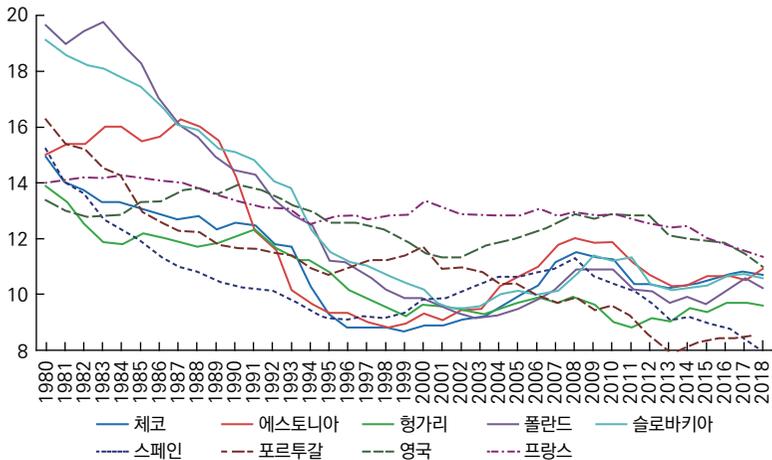
41) 일반적으로 2.1명을 인구의 현상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보며, 이를 대체 출산율이라고 함.

42) 김성철 외,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3.

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와 비교했을 때 1990년대 초반을 전후로 동유럽 국가들의 출생률이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과 2018년 현재를 비교 했을 때 동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출생률 격차도 감소하였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출생률은 2000년대 진입하고 나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인다. 에스토니아의 출생률은 1980년대 중후반에는 인구 천 명당 15.8명이었으나, 1990년대 급격하게 감소하여 평균 10.4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체제전환 기간 동안의 높은 낙태율과 경제 침체, 주거 환경 악화 및 젊은 연령층의 해외 유출 등에서 기인한다.⁴³⁾

〈그림 III-7〉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출생률 비교

(단위: 1,000명당 출생자 수)



주: 출생률(Birth rate): 인구 1,000명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43) Franz rothenbacher,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Population since 1850*, p. 499, p. 501.

라. 결혼 및 가족계획

체제전환기간 동안 동유럽에서의 출산율과 출생률 급감은 결혼 및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현상이 증대된 것에서 기인한다.⁴⁴⁾ 실제로 에스토니아의 20~24세의 혼인율은 1990년 여성과 남성이 각각 55.9%, 33.4%에서 2000년 13.2%, 6.2%로 급감하였다. 이는 10년 만에 절반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5년이 될 때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20~24세의 혼인율이 1990년 여성과 남성이 각각 61.8%, 38.1%에서 2000년 42.3%, 23.8%로 급감하였다.⁴⁵⁾ 1990년대 이후 20대 초반의 혼인율이 급감한 것이다. 더 많은 동유럽 국가의 초혼 연령 통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990년 이들 국가의 초혼 연령은 여성은 20대 초반, 남성은 20대 중반이었던 것이 2000년에 이르러서는 여성은 20대 중반, 남성은 20대 후반으로 연기 되었다. 초혼 연령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최근에는 여성은 20대 후반, 남성은 30대 초반이 되었다.

〈표 Ⅲ-2〉 동유럽 국가의 초혼 연령

(단위: 나이)

국가	성별	1990	2000	2010	2018
체코	남자	24.3	27.6	30.8	31.9
	여자	21.6	24.6	27.9	29.2
에스토니아	남자	-	28.1	30.5	32.8
	여자	-	25.2	28.0	29.9
헝가리	남자	24.7	27.6	31.2	32.4
	여자	22.0	24.8	28.3	29.6

44) 신윤정, 『동유럽 국가의 저출산 및 가족 정책 현황과 시사점』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p. 105.

45) Franz rothenbacher,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Population since 1850*, p. 97.

국가	성별	1990	2000	2010	2018
폴란드	남자	-	26.5	28.4	29.8
	여자	-	24.1	26.1	27.4
슬로바키아	남자	-	26.9	30.0	29.2
	여자	-	24.1	27.2	26.5
프랑스	남자	28.0	30.7	32.8	-
	여자	25.9	28.4	30.7	-
스페인	남자	27.8	30.2	33.1	35.6
	여자	25.6	28.1	30.9	33.5
포르투갈	남자	-	27.4	29.9	32.9
	여자	-	25.2	27.7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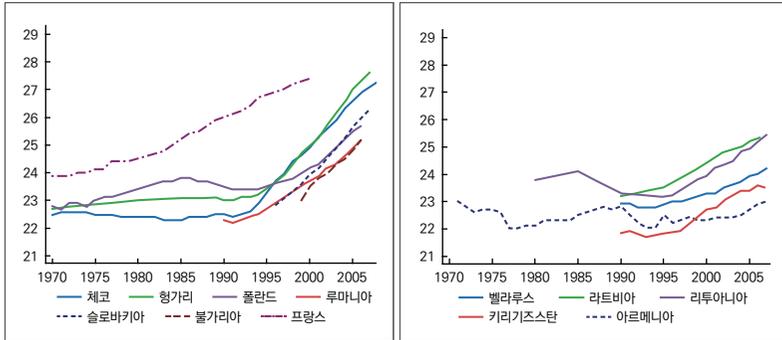
주: 영국의 초혼 연령 통계는 제공되지 않음.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 (Accessed July 2, 2020).

체제전환기간 동안 초산 연령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초산 연령은 비교적 어렸으나, 체제전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 1970~1980년대 20대 초반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던 동유럽의 초산 연령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급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며, 2005년에는 20대 중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른다. 한편, 프랑스의 초산 연령은 1970년대부터 이미 동구권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시간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체제전환기 동유럽 국가의 초산 연령 상승 추이가 프랑스보다 더 가파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소련 국가의 경우에도 아르메니아를 제외한 국가의 초산 연령이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 동유럽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는데, 이는 동유럽 국가가 구소련 국가에 비해 사회·문화·지리적 여건상 서유럽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 서유럽 국가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Ⅲ-8〉 동유럽(좌)과 구소련(우) 국가의 초산 연령

(단위: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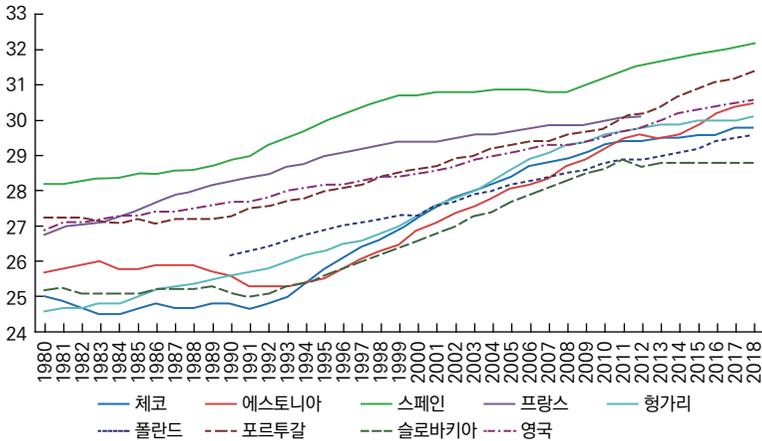
자료: Elizabeth Brainerd,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Countries: Causes, Consequences, and Questions," p. 4.

평균 출산 연령 통계를 살펴봐도 초산 연령과 마찬가지로 체제 전환 전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유럽 국가의 평균 출산 연령은 전 기간에 걸쳐 서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체제전환기를 거치면서 체제전환 국가 대부분의 평균 출산 연령이 이전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그림 Ⅲ-9〉). 개별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에스토니아와 영국의 평균 출산 연령 격차가 감소하는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체제전환기 동안의 일부 동유럽 국가의 평균 출산 연령은 서유럽의 평균 출산 연령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1990년대 상승세가 두드러진 국가로는 체코와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를 꼽을 수 있다. 체코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80년대 24.7살의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1990년 전후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27.2살, 2010년에는 29.6살까지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에스토니아의 평균 출산 연령은 1980년대 평균 25.8살에서 1994년 전후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26.9살, 2010년에는 29.2살까지 상승하였다. 슬로바키아 또한 1980년대 평균 25.2살에서 1991년 전후로 상승하기 시

작하여 2000년에는 26.6살, 2010년에는 28.6살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비교 대상 국가인 스페인과 영국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비교적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III-9〉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평균 출산 연령 비교

(단위: 나이)



주: 평균 출산 연령(Mean age of women at childbirth)

자료: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 (Accessed July 2,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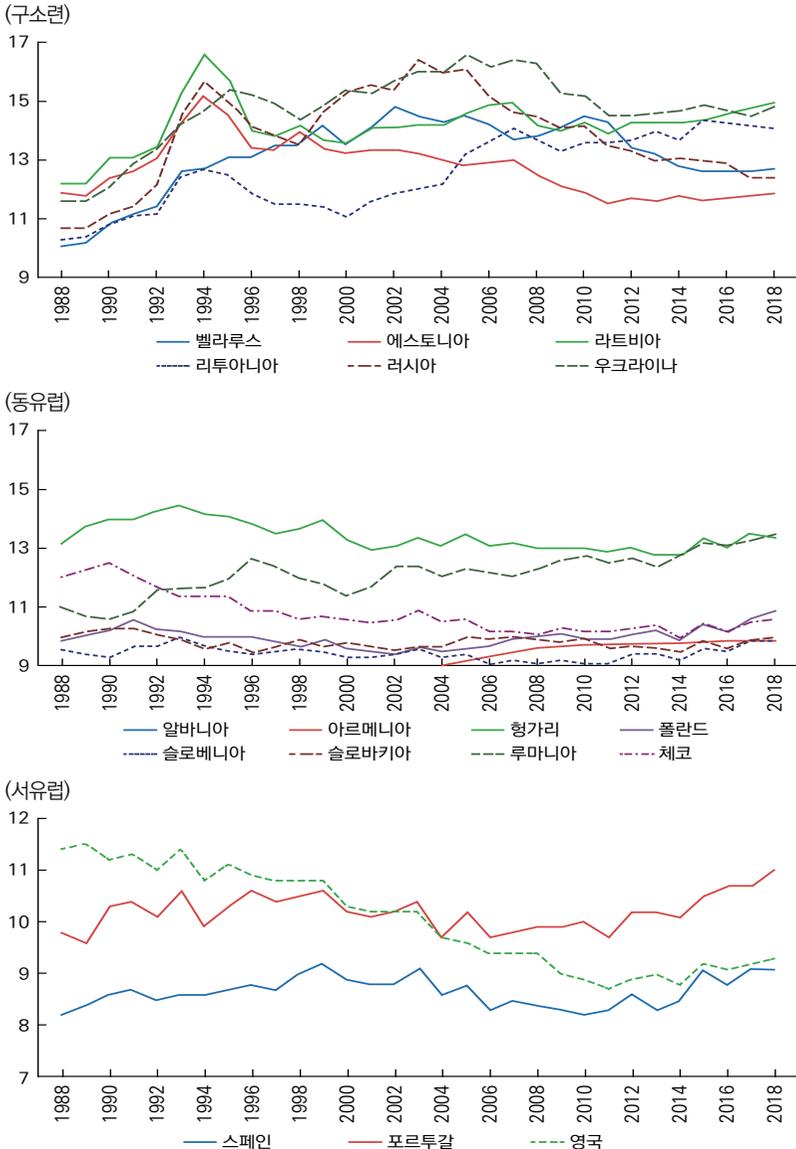
마. 사망률

동유럽 국가와 서유럽 국가의 전반적인 사망률 격차는 체제전환 이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출생률만큼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에서 체제전환 초기 사망률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데, 이는 출생률 급감과 젊은 인구의 유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⁴⁶⁾ 소련이 해체됨으로 인해 소련 국가에서의 이민자 수가

46) Franz rothenbacher,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Population since 1850*, p. 499, p. 545. 해당 통계에서 나타난 국가 중 러시아를 제외한 구소련 국가들의 총인구는 1990년을 기점으로 비교적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그림 III-10〉 구소련·동유럽·서유럽 주요 국가의 사망률 비교

(단위: 1,000명당 사망자 수)



주: 사망률(Death rate): 인구 1,000명당 인원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줄고, 서유럽으로의 이민이 증가하였다. 또한 인구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러시아인들은 고국으로 귀국하였다.

한편,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전후 사망률 변화 추이는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체코의 사망률은 1990년 이후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에 반해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에도 사망률이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서유럽의 사망률 역시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동유럽의 사망률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영국의 사망률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반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우 사망률이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이점이다.

바. 인구 이동(순이민자 수)

전통적으로 동유럽 국가의 인구 유출은 낮은 편이었으나, 1990년 전후 체제전환과 함께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민, 특히 서유럽으로의 이민이 엄격하게 차단되었으나,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경제·사회적 개방은 이들 국가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를 촉진하였다.⁴⁷⁾

구소련 국가에서의 인구 유출은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의 이동에서 비롯되었다. 벨라루스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주변국가로 유출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았지만, 1990년에는 인구 유출 규모가 유입 규모를 상회하였다. 체제전환 이전 에스토니아의 순이민자 수는 양의 값이었으나 1990년 급격한 인구 유출 증가로 인해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47) Franz rothenbacher,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Population since 1850*, p. 39.

〈표 III-3〉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순이민자 수 비교

(단위: 1,000명)

		1982	1987	1992	1997	2002	2007	2012	2017
구 소 련	벨라루스	47.1	-23.0	-63.1	56.1	-6.4	63.9	72.1	43.6
	에스토니아	25.9	15.5	-111.9	-1.2	-18.4	-15.2	-10.5	19.6
	라트비아	30.8	41.9	-116.5	-46.6	-72.5	-86.6	-83.3	-74.2
	리투아니아	43.8	36.9	-100.3	-93.9	-99.1	-150.9	-146.2	-163.9
	러시아	1100.6	890.3	2490.1	2374.7	1778.1	2326.7	1800.6	912.3
	우크라이나	104.4	189.1	0.0	74.4	-462.3	-165.4	269.5	132.2
중 · 동 부 유 럽	체코	-52.9	5.7	30.0	46.0	47.4	250.9	60.0	110.1
	슬로바키아	-34.8	-35.3	-15.1	-3.0	1.2	-8.9	11.3	7.4
	헝가리	-115.8	-91.6	100.0	78.6	61.6	25.2	30.0	30.0
	폴란드	-119.2	-305.0	-160.0	-85.2	-183.5	-178.5	-320.8	-147.0
	루마니아	-200.0	-200.0	-520.0	-580.8	-468.2	-774.7	-300.0	-370.0
	슬로베니아	68.4	32.6	-17.5	1.5	15.0	39.3	16.6	10.0
	알바니아	-0.1	-0.1	-443.2	-179.6	-176.8	-217.4	-136.6	-70.0
서 유 럽	스페인	97.0	76.9	-43.3	-67.7	319.3	931.1	2908.2	2273.8
	포르투갈	108.2	198.6	-66.9	-147.9	149.1	173.6	178.4	92.1
	영국	106.4	39.1	-97.5	98.8	205.4	513.4	992.2	2189.4

주: 순이민자 수(Net migration)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1993년에는 순이민자 수가 평균 인구의 2% 수준에 이르렀다.⁴⁸⁾ 라트비아의 경우 소련이 해체됨으로 인해 소련 국가에서의 이민자 수가 줄고, 서유럽으로의 이민이 증가하였다. 라트비아에 살고 있던 러시아인들도 고국으로 귀국하였다.⁴⁹⁾ 이로 인해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이민자가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48) *Ibid.*, p. 499.

49) *Ibid.*, p. 545.

이전 양의 값이었던 순이민자 수는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보인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리투아니아는 인구의 유입이 많은 국가였는데,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산권 붕괴 이후 인구 유출이 급증하였으며, 순이민자 통계는 최근까지도 음의 값을 보인다. 한편, 1990년대 전후 동유럽 국가에서의 인구 유출은 주로 서유럽과 미국으로의 이민에서 기인한다.

3. 동유럽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분석

가. 일반적 요인

일반적으로 인구 변화는 ① 출산율과 ② 사망률, 그리고 ③ 순이민자 수에 영향을 받는다. 출생과 사망, 그리고 인구이동의 결과 총인구수와 인구구조가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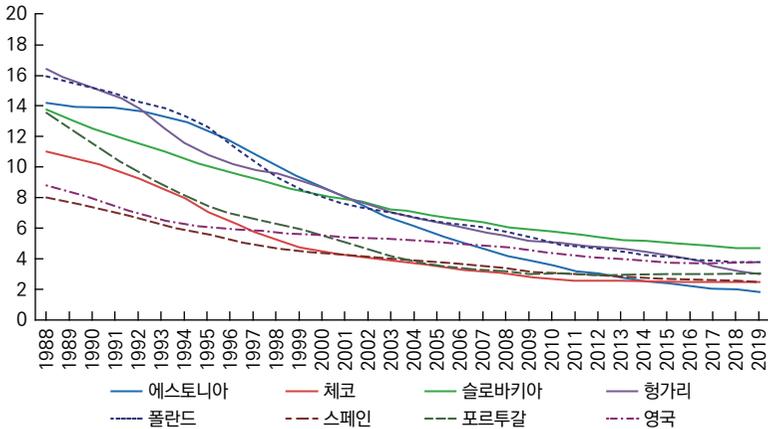
출산율은 혼인과 더불어 가족계획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출산율이 높다 하더라도 영아 사망률이 높은 경우 젊은 연령의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2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동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는 추세에서 야기되었다. 동유럽 국가의 혼인 연령은 서유럽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나,⁵⁰⁾ 체제전환과 함께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1989년 동유럽 국가의 초혼 연령은 20대 초반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20대 중반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동유럽 국가의 영아 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

50) *Ibid.*, pp. 86~87.

였다. 이는 사망률 통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림 Ⅲ-11〉 동유럽과 서유럽 주요 국가의 영아 사망률 비교

(단위: 1,000명당 사망자 수)



주: 영아 사망률(Mortality rate, infant, per 1,000 live bir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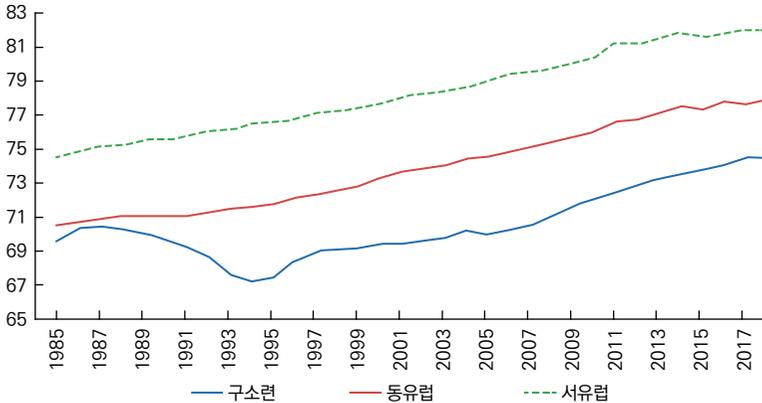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기대수명의 개선은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기대수명은 영아 사망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사회주의 체제 당시 동유럽 국가의 기대수명은 서유럽 국가에 비해 낮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체제전환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유럽에서의 기대수명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구소련 국가의 기대수명은 체제전환 초기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기대수명 하락은 특히 구소련 국가 남성의 기대수명 하락에서 기인했는데, 남성의 음주와 같은 생활 습관과 낮은 삶의 질, 근로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⁵¹⁾

51) *Ibid.*, p. 547, p. 591.

〈그림 III-12〉 구소련·동유럽·서유럽 국가의 기대수명 추이

(단위: 나이)



주: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나. 사회경제적 요인

체제전환 이후 관찰되는 동구권 국가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쟁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경제 구조 조정과 실업률과 같은 부정적인 경제 충격이 출산율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며, 두 번째는 시장 경제 개혁을 통한 새로운 기회와 가치관 변화가 출산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논의이다. Tomas Sobotka(2003)는 중부유럽에서의 인구구조 변화는 새로운 기회의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에 반해 구소련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는 고용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평가한다.⁵²⁾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52) Tomas Sobotka, "Re-Emerging Diversity: Rapid Fertility Chang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s," p. 476.

변화는 그것이 긍정적인 요인이든, 부정적인 요인이든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에서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유럽 국가에서의 결혼과 출생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서는 경제 구조조정, 여성의 노동 참여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를 등을 꼽을 수 있다.⁵³⁾ 낮은 출산율의 구체적인 요인으로 ①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의 해체, ② 전환기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고용 불안정, ③ 개인주의의 확산과 여성 임금(육아의 기회비용) 상승 등이 지목된다.⁵⁴⁾

(1)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의 해체

사회주의의 붕괴는 경제적 혼란과 더불어 사회주의 집권기 동안에 제공되었던 사회 제도와 주거 정책의 종료를 뜻하고 이는 결혼을 연기하는 사회적 경향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벨라루스의 경우 1996년 혼인율이 1989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⁵⁵⁾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연금, 보건·의료 서비스와 무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최저 임금이 비교적 높았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

53) Franz rothenbacher,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Population since 1850*, p. 4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y,” special report, no. 4 (2005), p. 16, p. 41.

54) Manfred Perltitz, Lasse Schulze, and Christina B. Wilke,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Management implications,” *Journal of East European Management Studies*, vol. 15, no. 2 (2010), pp. 149~176; Eizabeth Brainerd,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Countries: Causes, Consequences, and Questions,” p. 7.

55) Franz rothenbacher,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Population since 1850*, p. 4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y,” p. 223.

이라는 슬로건 하에 남녀차별 없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였다. 또한, 동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⁵⁶⁾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에 대한 비용이 낮거나 무료였으며, 대부분의 직장에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즉,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자녀 양육을 촉진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존재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으며, 남녀의 임금 수준도 비슷하였다.⁵⁷⁾

그러나, 체제전환 과정에서 여성들이 주로 종사했던 공공분야는 물론 공공보육 서비스도 축소되었으며,⁵⁸⁾ 이는 동유럽 국가의 출산율을 현격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 지원 보육 시설 및 유치원과 기업이 제공하는 보육 시설이 거의 사라진 것이다.⁵⁹⁾ 이러한 출산과 육아 관련 공공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축소는 가족계획의 축소 또는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념적 목표와 관계없이 재정난으로 인해 이미 완전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나, 체제전환 초기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시기 동구권에서는 사실상 사회보장제도의 부재를 경험하였다. 본격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1990년대 중반에서야 시작되었기 때문에 체제전환 이후 국민들은 긴급지원 이외의 사회보장제

56) 신윤정, 『동유럽 국가의 저출산 및 가족 정책 현황과 시사점』, p. 102.

57) Elizabeth Brainerd, "Women in Transition: Changes in Gender Wage Differentials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4, no. 1 (2000), pp. 138~162.

58) 신윤정, 『동유럽 국가의 저출산 및 가족 정책 현황과 시사점』, p.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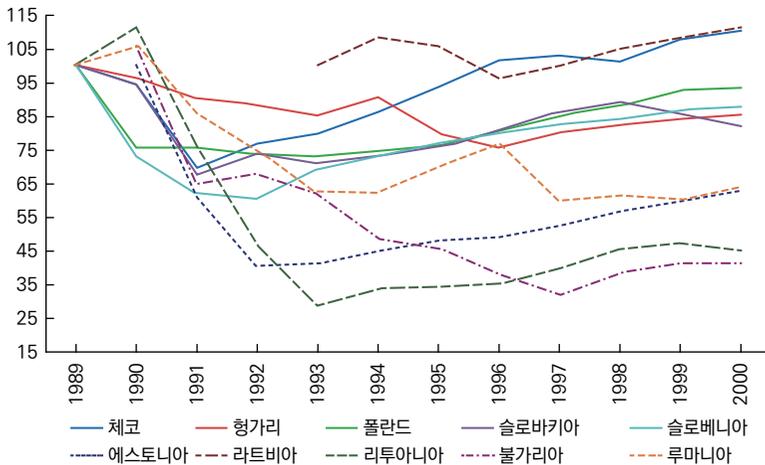
59) Elizabeth Brainerd,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Countries: Causes, Consequences, and Questions," p. 9.

도를 향유하기가 어려웠다.

(2)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출산 연기

경제적 불확실성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는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출산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⁶⁰⁾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동유럽은 자유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기회와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을 더 받았으며, 구소련의 경우 자유시장경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에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3〉 동유럽 국가의 실질 임금 평균



주: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각각 1990년, 1993년을 100으로, 그 외 국가들은 1989년을 100으로 보았음.

자료: Leon Podkaminer, "Development Patterns of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in the course of transition and following EU accession)," wiiw Research Reports, no. 388 (2013), p. 17.

60) Priya Ranjan, "Fertility Behaviour under Income Uncertainty," p. 28.

대부분의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는 주요 시장 경제 개혁 조치를 1990~1991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급작스러운 경제 구조 개혁은 빠른 사회 변화와 함께 단기적이지만 급격한 혼란을 야기하였다. 전황기 불황에 겪은 다양하고 갑작스러운 경제충격(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으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은 확대되었다. 체코의 경우 1994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실질 소득이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녀가 없는 가정의 구매력은 8% 증가한 데 반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구매력은 약 2% 하락하였다.⁶¹⁾

동유럽보다는 구소련의 경제 체제전환이 더욱 급작스럽고 비체계적(erratic)이었다. 예컨대 러시아의 민영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임금 자유화와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임금 결정 제도가 동유럽의 임금 제도보다 더 분권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체제 전환 초기 러시아의 임금 결정은 임금 계획 제도가 폐지되어 기업 자율성에 의존하였으며, 동유럽은 임금을 단체 교섭에 따르는 방식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⁶²⁾ 이러한 사실은 구소련 지역 국가들이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보다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여성 임금과 교육률(출산 및 육아의 기회비용) 상승

체제전환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여성 임금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출산율 약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은 소득수준과 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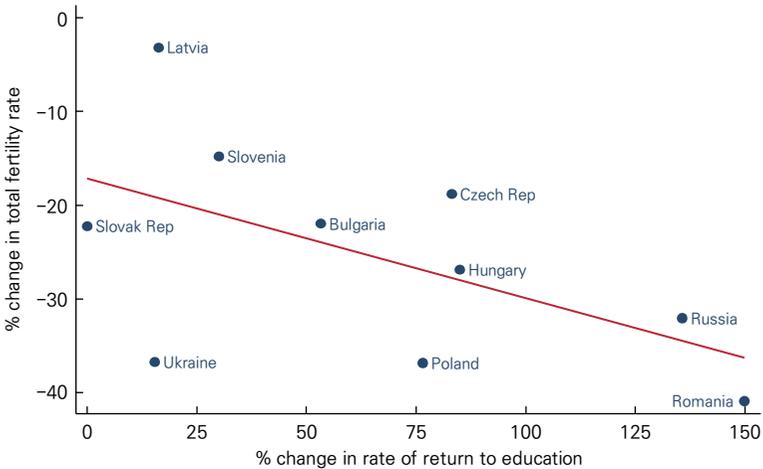
61) 유희열 외, 『통일한국 대전략 연구: 동유럽 체제전환과 사회통합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2012).

62) Elizabeth Brainerd, "Women in Transition: Changes in Gender Wage Differentials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p. 142.

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임금이 상승하면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⁶³⁾ 같은 맥락에서 여성의 학력 증진이 소득수준을 상승시키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림 Ⅲ-14〉는 교육 투자 수익률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1990~2002년 동유럽 국가에서 교육 투자 수익률과 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교육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4〉 출산율과 교육 투자 수익률과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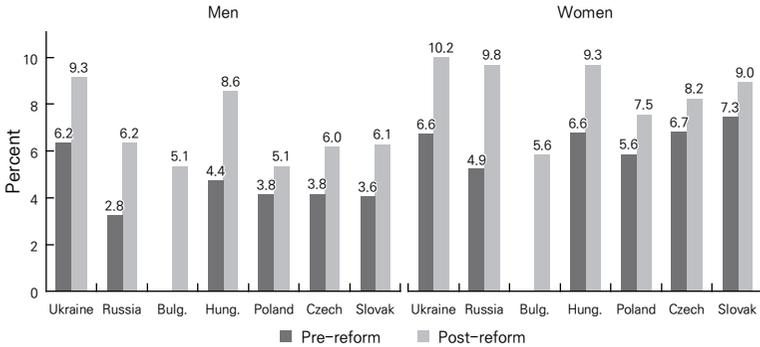
자료: Elizabeth Brainerd,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Countries: Causes, Consequences, and Questions," p. 8.

동유럽과 구소련의 교육에 따른 수익률은 체제전환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5〉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부각되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추가 교육 1년에 따른 수익률은 각각 6.6%에서 10.2%, 4.9%에서

63) Priya Ranjan, "Fertility Behaviour under Income Uncertainty," p. 26.

9.8%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동유럽 국가에서도 적게는 1.5~2.7% 가량 상승하였다.

〈그림 Ⅲ-15〉 체제전환 전후 추가 교육 1년에 따른 수익률 변화



주: 월 임금과 교육 연수 간의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자료: Elizabeth Brainerd, "Women in Transition: Changes in Gender Wage Differentials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p.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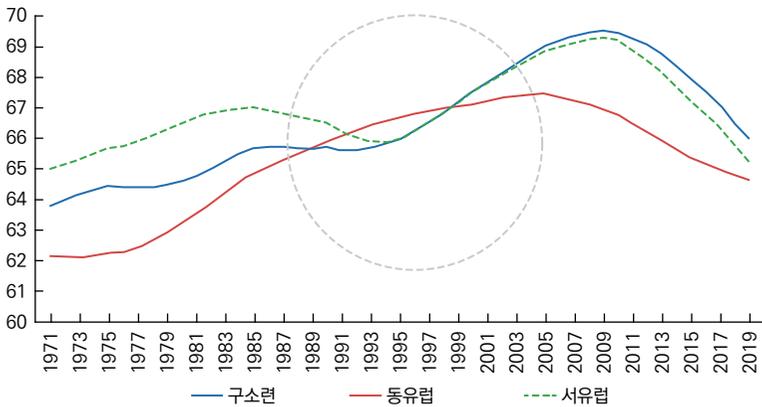
다.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 변화(고령화)

〈그림 Ⅲ-16〉은 동유럽·구소련·서유럽의 생산가능인구 점유율을 보여준다. 체제전환 이전 동유럽·구소련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점유율은 서유럽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체제전환 초기 이러한 추세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앞서 인구증가율 통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특정 연령의 인구 점유율 하락은 해당 그룹 인구의 유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동유럽 국가는 체제전환 초기 서유럽으로의 인구유출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체제전환이라는 외부 충격이 사회주의권 국가가 누릴 수 있었던 인구 배당 효과를 축소시켰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동유럽·구소련의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서유럽의 생산가능인구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서야 하락한다는 점에서 미루어보았을 때 외부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이 조율되었을 경우 동유럽·구소련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점유율 또한 201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III-16〉 구소련·동유럽·서유럽 국가의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점유율 변화
(단위: %)



주: Population ages 15-64 (% of total population)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체제전환 국가의 인구구조는 서유럽 국가의 구조로 빠르게 수렴하였으며, 고령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서유럽의 고령화는 1990년대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 동유럽은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동유럽 국가는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미 고령화 사회⁶⁴⁾에 진입한 상황이

64) 이론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7~14%), 고령 사회(14~20%), 초고령 사회(20% 이상)를 구분한다.

었는데, 1995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9년 현재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 초고령 사회에 막 진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율과 유소년부양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각각의 부양 비율이 대조군인 서유럽 국가를 상회하기도 한다.

〈표 III-4〉 동유럽 주요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 추이

(단위: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구 소련	벨라루스	10.8	10.0	10.7	12.4	13.5	14.7	14.0	14.3
	에스토니아	12.5	11.5	11.7	13.6	15.0	16.8	17.5	18.8
	라트비아	13.1	11.7	11.9	13.7	15.0	16.9	18.2	19.5
	리투아니아	11.4	10.4	10.9	12.3	13.9	16.0	17.3	18.7
	러시아	10.3	9.9	10.3	12.1	12.4	13.8	13.1	13.6
	우크라이나	11.8	11.2	12.0	13.5	13.8	15.9	15.7	15.7
중·동부 유럽	체코	13.6	11.7	12.7	13.2	13.8	14.0	15.4	18.0
	슬로바키아	10.5	9.3	10.2	10.7	11.3	11.6	12.5	14.0
	헝가리	13.6	12.1	13.5	14.3	15.1	15.6	16.1	17.5
	폴란드	10.2	9.2	10.0	10.9	12.0	13.1	13.5	15.7
	루마니아	10.2	9.5	10.4	12.0	13.6	15.2	15.7	17.0
	슬로베니아	11.4	9.9	10.6	12.3	14.1	15.5	16.7	18.0
	알바니아	5.3	5.4	5.5	6.4	7.1	8.5	10.6	12.6
서유럽	스페인	11.1	11.8	13.4	15.1	16.7	16.7	17.1	18.6
	영국	14.9	15.1	15.7	15.9	15.9	16.0	16.6	18.0
	포르투갈	11.5	12.2	13.7	15.0	16.3	17.2	18.37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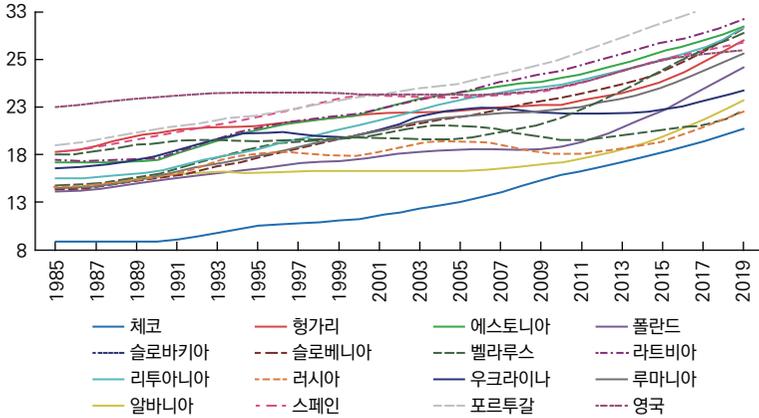
주 1.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2. 음영은 처음으로 양의 증가를 보인 연도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그림 III-17〉 동유럽 주요 국가의 노년 부양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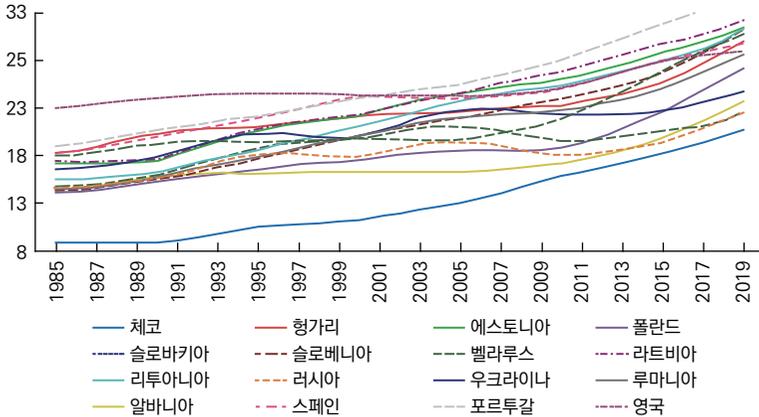
주 1. Age dependency ratio, old (% of working-age population)

2.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그림 III-18〉 동유럽 주요 국가의 유소년 부양 비율

(단위: %)



주 1. Age dependency ratio, young (% of working-age population)

2. 생산가능인구 대비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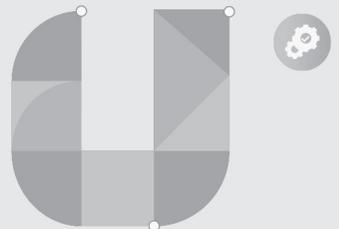
본 장에서는 급진적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 국가의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동구권 주요 체제전환 국가들의 인구피라미드는 방추형으로 변화되었으며,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인구 증가율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러시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동유럽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유럽과 비교하였을 때 출산율과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출산연령도 상승하였다. 다만, 사망률과 이민자 수에 있어서는 특기할만한 동구권 국가들만의 패턴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인구구조 악화에는 출생률, 사망률, 기대수명과 같은 일반적인 요인 이외에도 체제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들 동유럽 국가의 인구구조가 악화된 배경에는 실질임금 하락과 실업,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원인도 있지만, 정치·경제·사회적인 자유화에서 창출된 새로운 기회와 가치관의 형성과 같은 긍정적인 원인도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동유럽에서의 인구구조는 새로운 기회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나, 구소련 국가들의 인구구조는 경제침체 및 실업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일부 동유럽 국가의 경우 인구구조는 변화하였으나 경제적 충격이 단기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동구권 국가들의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인구구조는 서유럽 국가의 인구구조에 빠르게 수렴하였으며, 고령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동구권 국가들의 인구구조는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빠

르게 악화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급진적 체제전환에서 기인한 것인지, 체제전환 자체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동유럽과 다른 체제전환 경로를 선택한 동남아의 사례를 함께 살펴 봐야할 것이다.

IV. 동남아시아의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본 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가의 체제전환 경험과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동남아의 대표적인 체제전환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을 검토한다.⁶⁵⁾ 이들 국가는 동유럽·구소련 국가와 달리 체제전환을 점진적으로 이행한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점진적 체제전환 국가에서는 동유럽이 체제전환 초기 경험한 전황기 불황 등의 극심한 충격을 겪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동유럽·구소련 국가와 동남아의 체제전환 유형의 차이가 이들 국가의 인구구조에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먼저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들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검토한다. 동유럽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인접한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1. 동남아시아 체제전환의 유형과 특징

동남아 국가 체제전환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 체제를 유지한 채 경제 체제전환을 이행한 것이다.⁶⁶⁾ 이들 국가는 사회주의와 시장경

65) 중국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체제전환국이지만, 최근까지도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체제전환과 인구구조의 상관관계를 왜곡할 개연성이 있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1980년대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989년 제정된 「건강법(Health Law)」에 의거하여 가족계획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존중되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산아제한 정책의 강제성이 약하고, 실제로도 2000년대까지 베트남의 출산율이 2를 상회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사례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James Allman et al.,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Vietnam,"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22, no. 5 (1991), p. 314.

66) 미얀마의 경우 1988년 체제전환 선언 이후 2011년 첫 민간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정치적 체제전환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체제전환을 군부가 주도하였고, 최근

제를 혼합하며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한 채 점진적인 개혁을 피하였다. 체제전환 기간 동안 정치 체제의 연속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또한 체제전환의 목표를 시장경제 제도의 도입이 아닌 경제난의 극복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두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으로도 비교적 혼란을 겪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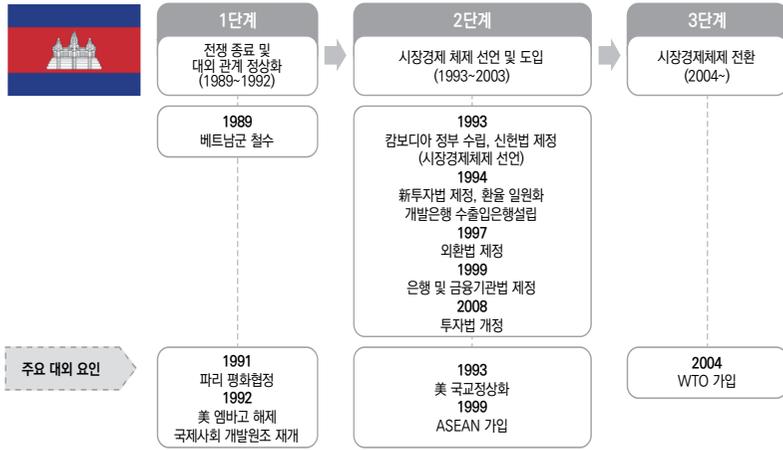
동남아 국가의 체제전환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장경제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국가는 동유럽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한 경제난에 직면하였으나, 일련의 개혁 조치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중국의 체제전환과 구소련의 붕괴는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주의 블록으로부터의 경제협력 사업과 원조가 중단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캄보디아는 1989년부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조치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토지 사유화 및 국영 기업 민영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농업 부문에서 먼저 가격 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지속되던 내전이 1991년 종식되고, 당해 10월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휴전, 난민귀환, 군대 해산과 무장해제, 자유총선 등이 합의되어 캄보디아는 UN 잠정통치기구(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국제사회의 對캄보디아 개발 원조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1993년에는 신헌법 제정과 함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선언하였다. 이후 외국인투자법 개정과, 금융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단행한 결과 1999년 ASEAN에

까지도 정치·경제 진반이 군부 세력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어 체제전환 초기 급격한 정치적 혼란을 겪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입하였으며, 2004년 147번째 WTO 회원국 지위를 승인받았다. 한편, 캄보디아는 정치체제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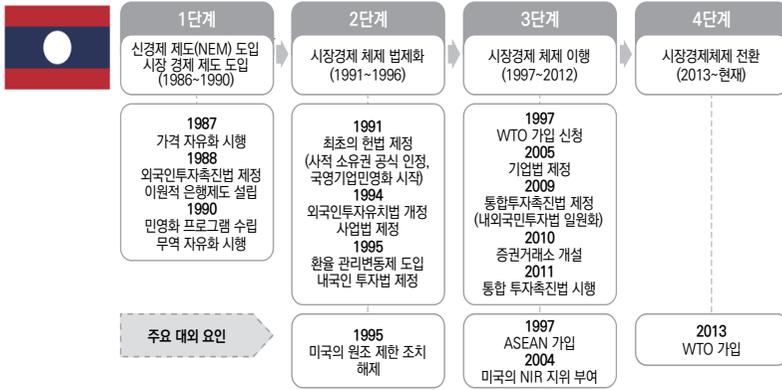
〈그림 IV-1〉 캄보디아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자료: 최장호·최유정·한하린,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가 북한에 갖는 함의』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출판예정).

라오스는 1986년 11월 신경경제제(New Economic Mechanism: NEM)를 발표하며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신경경제제는 시장 경제 제도 도입과 경제개방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 자유화가 시행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1991년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후 시장 경제 관련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법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이 되어서야 ASEAN 회원국이 되었다. 2013년 10여 년의 다자협상 끝에 WTO 158번째 회원국 지위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WTO에 가입한 이후에도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개방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라오스가 UN이 지정한 세계 최빈국인 것이 감안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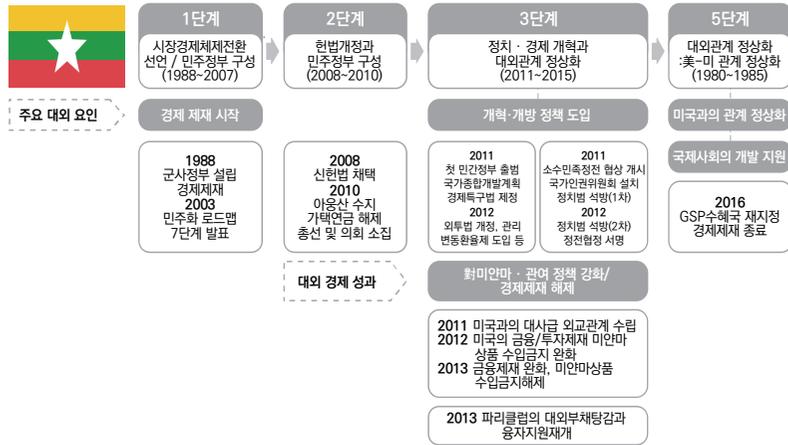
〈그림 IV-2〉 라오스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자료: 최장호·최유정·한하린,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가 북한에 갖는 함의』(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출판예정)

미얀마는 1988년 시장 경제 체제전환을 선언하였으나 2010년대 까지 경제 체제전환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2003년 「민주화 로드맵 7단계」를 수립하고 2008년 신헌법을 채택한 결과 정당제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체제전환을 형식적으로나마 완료하였다. 미얀마의 경제 체제전환은 아웅산 수치의 가택 연금 이 해제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미얀마의 정치범 석방과 첫 민간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미얀마의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이후 미얀마의 정치·경제 개혁 조치의 결과로 2016년에는 EU와 미국의 對 미얀마 경제 제재가 전면적으로 해제되었다. 그러나 로힝야 이슈와 같은 소수 민족 인권 탄압 문제로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논의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림 IV-3〉 미얀마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자료: 최장호·최유정·김범환·임수호,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p. 144.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우 1980년 신경제정책을 통해 제한적인 개혁 조치를 도입하였으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원조 중단 등으로 인해 개혁에 실패하였다. 일련의 자유화 정책과 통제 정책 끝에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본격적인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 베트남은 경제 성장을 위해 대외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1년 제시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로 로드맵을 단계별로 이행하였다. 그 결과 1994년 湄베트남 경제제재가 전면 해제되었으며, 1995년에는 미국과의 수교, ASEAN 가입이 완료되었다. 2007년 10여 년의 협상 끝에 150번째 WTO 회원국으로 승인받았다. WTO 가입 승인 당시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2018년까지 유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림 IV-4〉 베트남 체제전환의 단계 구분과 단계별 대외요인



자료: 최장호·최유정·김범환·임수호,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p. 132.

동남아 4개국의 경제적 체제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량 분석을 위해 WTO 가입을 이들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완료 시점으로 본다. WTO 가입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했다는 것은 경제 체제전환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⁷⁾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의 완결성 여부보다는 체제전환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안정되었는지를 주요한 변수로 본다. 이 점에 근거하였을 때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 선언 이후부터 WTO 가입 승인 시점을 연구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미얀마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시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을 완료 시점으로 산정한다.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기준에 따라 평균 7년에서 16

67) WTO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 이행과 함께 경제 전반에서의 시장 경제 제도 도입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WTO의 기존 회원국들과 양자 협상 및 다자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년이 소요된 것으로 본 것에 반해 동남아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평균 23~33년⁶⁸⁾이 소요되어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은 비교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 동남아(CLMV) 국가들의 체제전환 기간

구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시작	1989 시장경제 원리 도입	1986 신경제 제도	1988 시장경제 체제전환 선언	1986 도이머이 정책
WTO 가입	2004.10.13.	2013.2.2.	1995.1.1.	2007.1.11.
전환 기간	16년+ (1989~2004)	28년+ (1986~2016)	29년+ (1988~2016) ^{주)}	22년+ (1986~2007)

주: 미얀마의 체제전환 기간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해제 시점(2016년 완료)을 고려하여 산정
자료: 저자 작성.

이하에서는 체제전환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경제 지표의 추이를 살펴본다.

먼저 동남아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체제전환 이후 경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체제전환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1994년 경제 성장률이 급감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라오스의 GDP 성장률은 1992년 급증한 이후 전반적으로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본격적인 체제전환 정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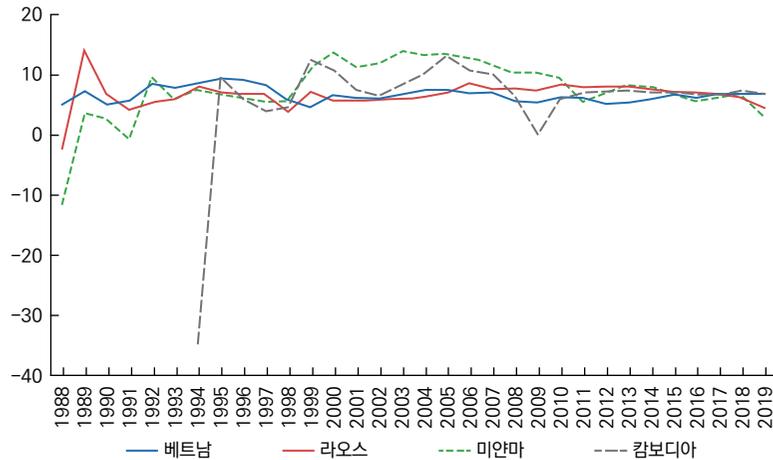
68) WTO 가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23년,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33년임.

2010년대 이후 시작되었다고 평가되지만, GDP 성장률이 2000년대 내내 10%를 상회한다. 베트남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5%를 상회하는 GDP 성장률을 보인다.

1인당 GDP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GDP 성장률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의 1인당 GDP가 1994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의 1인당 GDP 격차는 체제전환 이전에 비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체제전환 이전에는 라오스의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그 뒤를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순으로 따르고 있었으나, 2019년 현재에는 베트남의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또한 미얀마의 1인당 GDP가 캄보디아를 역전하였다.

〈그림 IV-5〉 동남아(CLMV) 국가들의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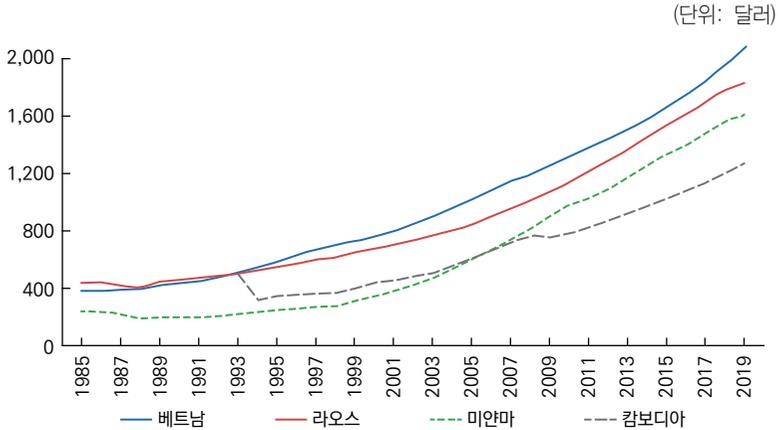
(단위: %)



주: GDP growth (annual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September 27, 2020).

〈그림 IV-6〉 동남아(CLMV) 국가들의 1인당 GDP 성장률



주: GDP per capita (constant 2010 USD)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September 27,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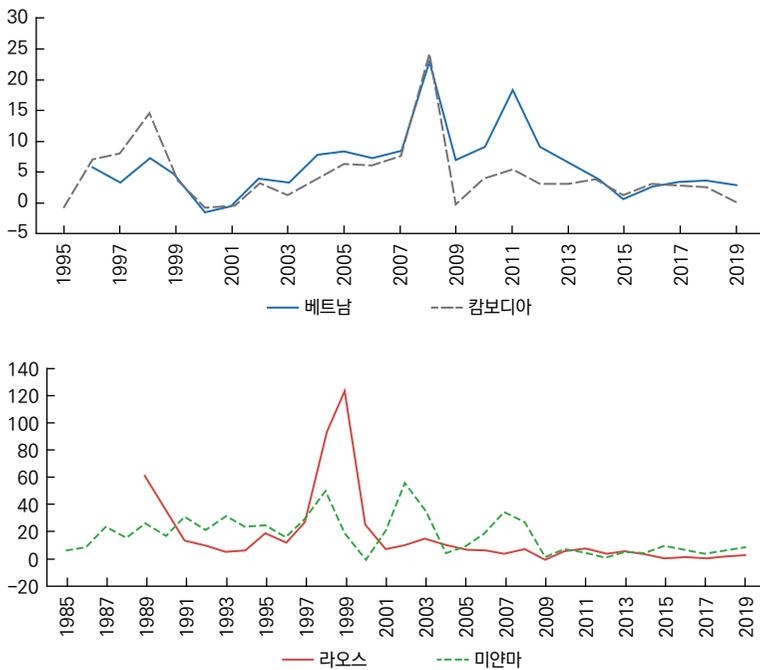
인플레이션 추이를 살펴보면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비해 라오스와 미얀마는 체제전환 이후에도 꽤 높은 물가상승을 겪은 것으로 나타난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인플레이션 통계는 각각 1995년과 1996년부터 제공된다. 이들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1998년과 2008년 금융위기에 단기적으로 급상승 하였으나, 2010년대 이전까지 평균 5~7% 수준을 보인다. 한편,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의 급락 폭이 상당히 크다. 라오스의 경우 1999년 인플레이션이 120%를 상회하는데 이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⁹⁾ 미얀마도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몇 번의 등락을 경험하는데 이는 대규모 통화 발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69)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가 닥치자 라오스 중앙은행은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를 만회하였음; Asian Development Bank, "Country Economic Review: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ugust 2001)," Asian Development Bank, LAO 2001-11 (2011), p. 19.

다.⁷⁰⁾ 미얀마의 인플레이션은 2009년부터 안정화되고, 변동 폭도 작아진다. 이들 국가의 물가상승률 변화는 주로 금융 위기와 같은 대외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이며 체제전환이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7〉 동남아(CLMV)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단위: %)



주: Inflation, consumer prices (annua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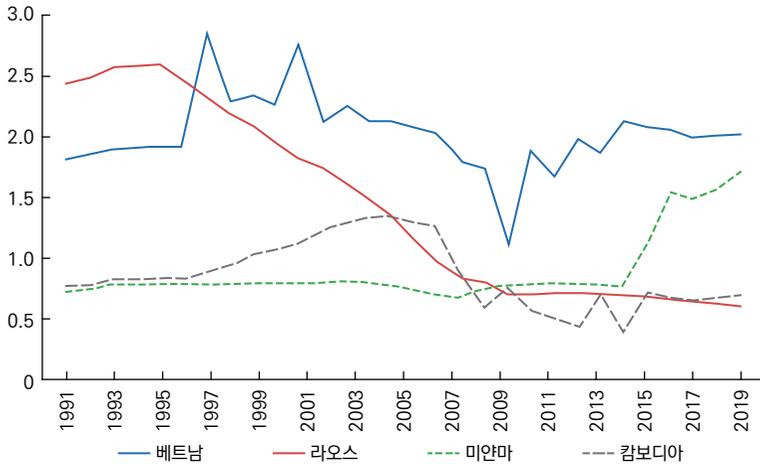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2, 2020).

70) 당시 미얀마 정부가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2009년에서야 미얀마중앙은행이 국고채를 시중 은행에 매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물가가 안정화 되었다; Asian Development Bank, "Support for Myanmar's Reforms for Inclusive Growth Program,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President: Sector Assessment: Macroeconomic Assessment," Asian Development Bank, ADB project 46372-001 (2012), p. 7.

이들 국가의 실업률은 1990년부터 전반적으로 3%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라오스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실업률이 꾸준히 하락하여 2010년대에는 1%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동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몇 번의 등락을 겪었으나 최근에는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실업률은 2000년대 후반부터 1% 이하를 유지하였는데, 미얀마의 경우 2016년 경제제재 해제를 기점으로 실업률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특이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2%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3장에서 살펴 본 동유럽 국가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V-8〉 동남아(CLMV) 국가들의 실업률

(단위: %)



주: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2, 2020).

동남아 체제전환 국가들의 체제전환 유형과 주요 경제 지표를 살펴본 결과 이들 국가는 체제전환으로 인해 정치·경제적인 혼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환기 불황을 겪었던 동구권의 사례와는 달리 동남아의 GDP, 1인당 GDP는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급격한 등락을 보이기는 하나 이는 체제전환보다는 동아시아·세계 금융 위기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 비교

본 절에서는 이들 국가의 체제전환 기간 동안 주요 인구 통계 지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동남아 주요 체제전환국의 인구 통계를 이들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지리적·문화적으로 유사한 국가들과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체제전환이라는 변수가 이들 국가의 인구구조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는 국가의 인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 자료이다. Ⅲ장에서 상술했던 바와 같이 피라미드는 피라미드형(인구 증가), 종형(인구 정체) 방추형(인구 감소)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구 전출입에 따라 별형(전입형)과 표주박형(전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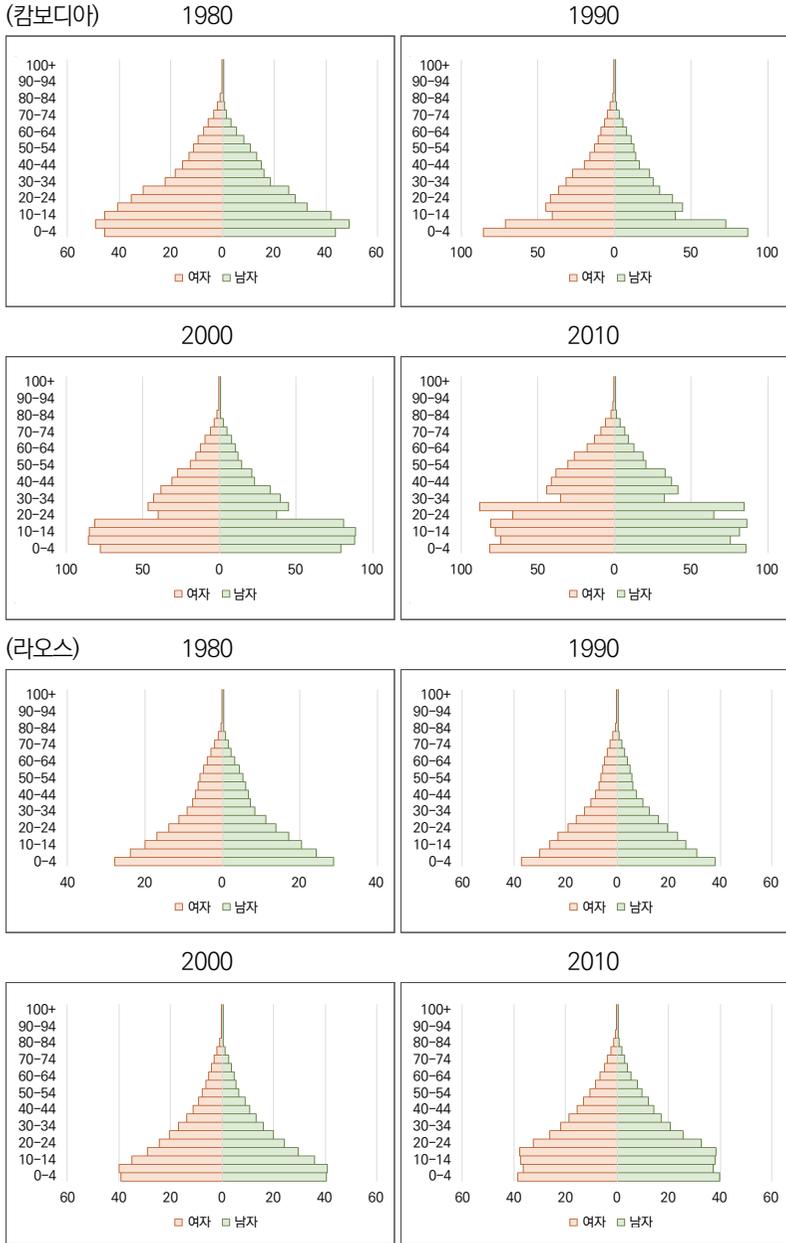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하락하여 고령화 사회로 변해가는 초기 단계의 모습이다.

〈그림 IV-9〉에 따라 국가별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주 대학살로⁷¹⁾ 1975~1979년 출생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청년층이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는 독특한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라오스는 캄보디아와 같은 시기에 베트남전을 경험했지만, 캄보디아처럼 인구구조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체제전환이 시작된 1986년부터 인구구조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종형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미얀마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와 달리 이미 방추형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캄보디아보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캄보디아나 라오스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우 미얀마와 같이 종형에서 방추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얀마와 베트남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고령화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71) 크메르 루즈(Khmer Rouge, 붉은 크메르)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좌익 무장단체이다. 크메르 루즈 정부는 공산주의 이상향을 추구하고 4년 동안 전문지식인과 기술자 중심으로 집단 학살했다. 당시 60~2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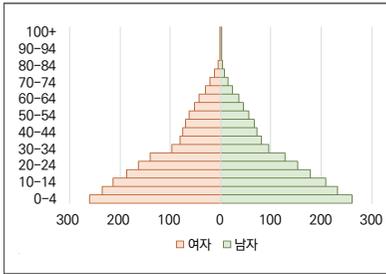
〈그림 IV-9〉 동남아(CLMV) 국가들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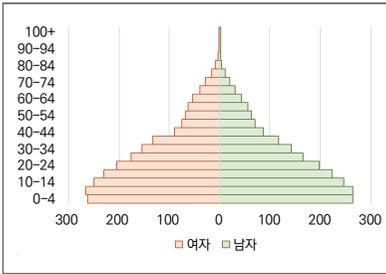


(미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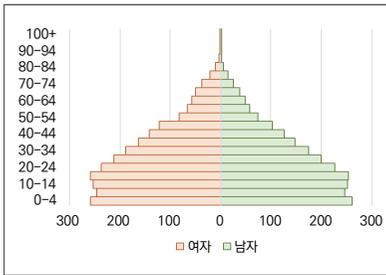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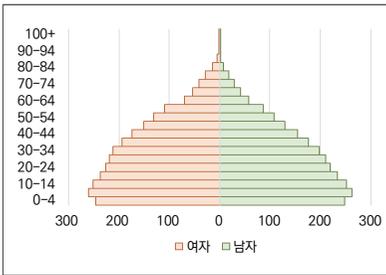
199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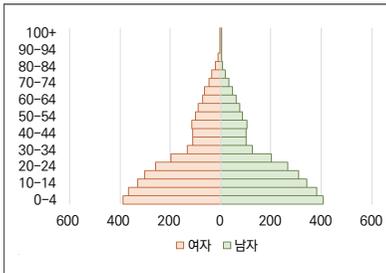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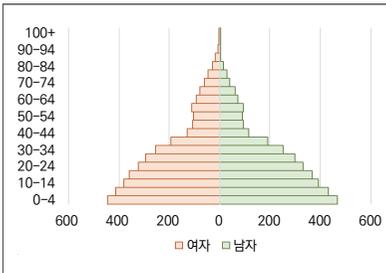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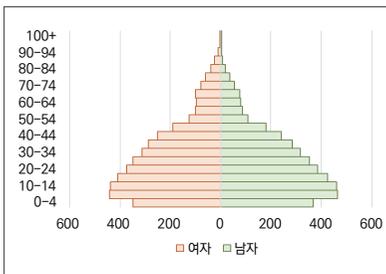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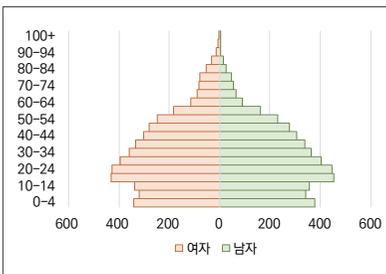
1990



2000



2010



자료: Population Pyramid, <<http://www.populationpyramid.net/>> (Accessed July 8,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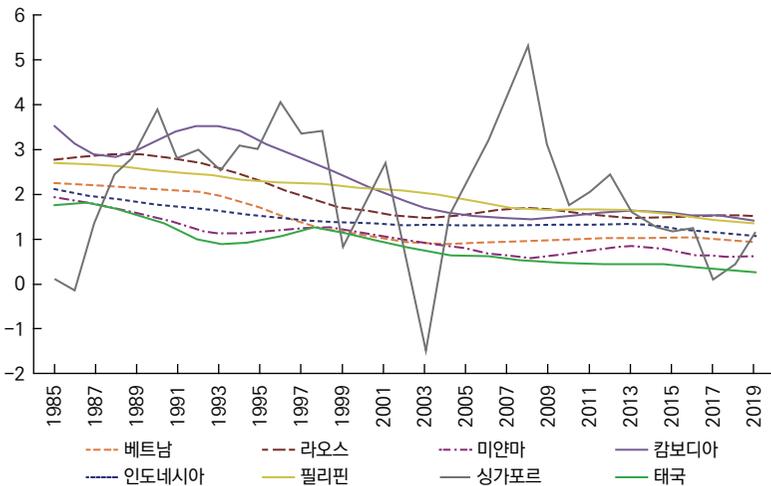
나. 인구 증가율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 증가율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인구 증가율은 출산율, 사망률, 이민자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 8개국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인구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남아 국가들의 인구 증가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거나, 현재까지도 양의 증가율을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1986년과 2003년 일시적으로 음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 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이며 많은 외국인과 교류하고 있어 인구 이동이 많은 예외적인 경우로 추정된다.

〈그림 IV-10〉 동남아 주요 국가의 인구 증가율 비교

(단위: %)



주: Population growth (annual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2, 2020).

다. 출산율과 출생률

합계출산율은 한 국가의 가임 여성이 평생 출산할 아이의 숫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인적 자본의 축적과⁷²⁾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고 본다.⁷³⁾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율이 모두 감소하였다. 다만, 체제전환국들의 출산율 감소가 비체제전환국에 비해 더 가파른 양상이다. 캄보디아의 출산율은 1985년 6.3에서 WTO에 가입한 2004년 3.3을 기록하며 약 2배가량 감소하였다. 라오스도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베트남과 미얀마의 경우 1985년 출산율이 모두 4.2에서 2017년 현재 각각 2.0, 2.2를 기록하여 대체 출산율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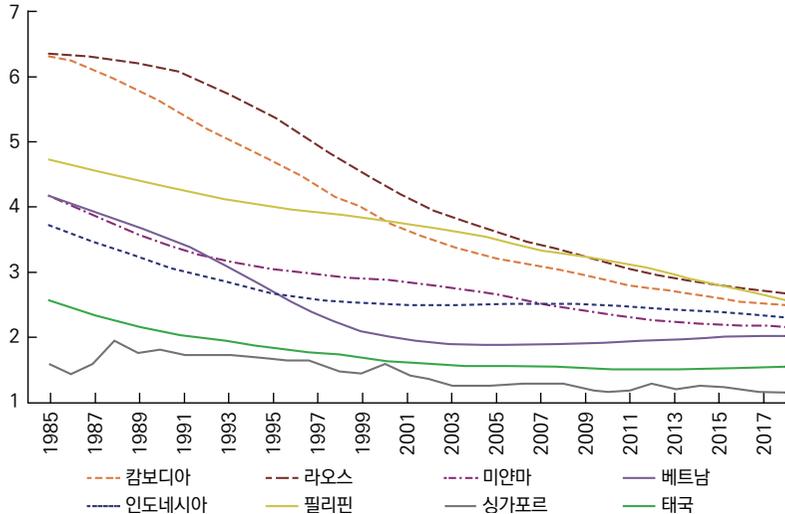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출산율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로 대체출산율에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들 국가의 출산율이 체제전환 이전에 절대적으로 높아서일 수도 있고 체제전환이 이들 국가의 출산율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출산율은 2~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2) Alan Fernihough, "Human Capital and the Quality-Quantity Trade-off During the Demographic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22, no. 1 (2017), p. 63.

73) Gary Baker and H. Gregg 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2 (1973), p. S284.

〈그림 IV-1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비교

(단위: 여성 1인당 출산율, 명)



주: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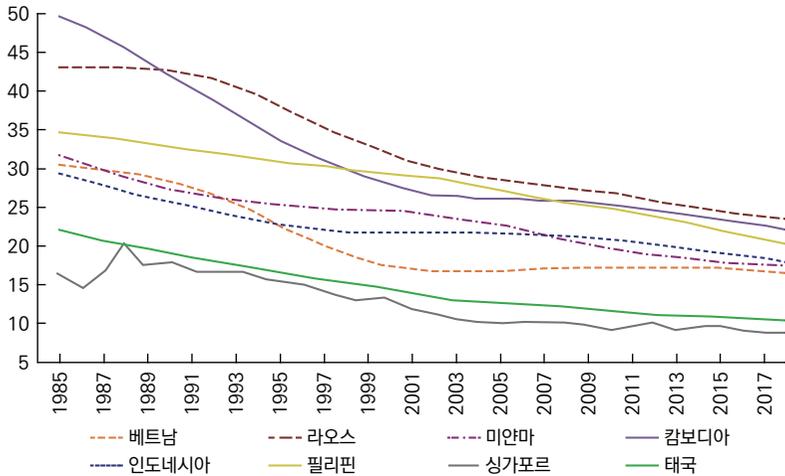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출생률 통계도 출산율 통계와 같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출생률은 1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말한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출산율은 1989년 전후 43~45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 약 30까지 하락한 이후 2018년 현재 22~23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30년 동안 두 배가량 하락한 수치이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출생률은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동남아 국가의 출생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들 국가의 출생률은 현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미얀마와 베트남의 출생률은 베트남이 더 빠른 속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체제전환 시작과 완료 시점에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출산율 감소

는 이혼 향도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⁷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 구조적 변화가 출생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12〉 동남아 주요 국가의 출생률 비교

(단위: 1,000명당 출생자 수)



주: Birth Rate, crude (per 1000 peopl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9,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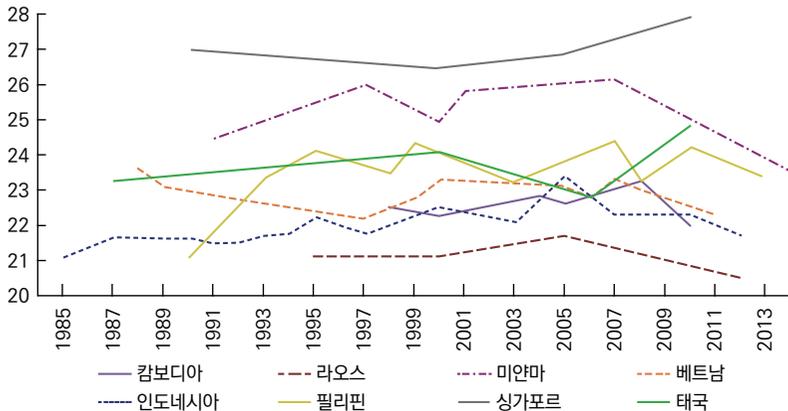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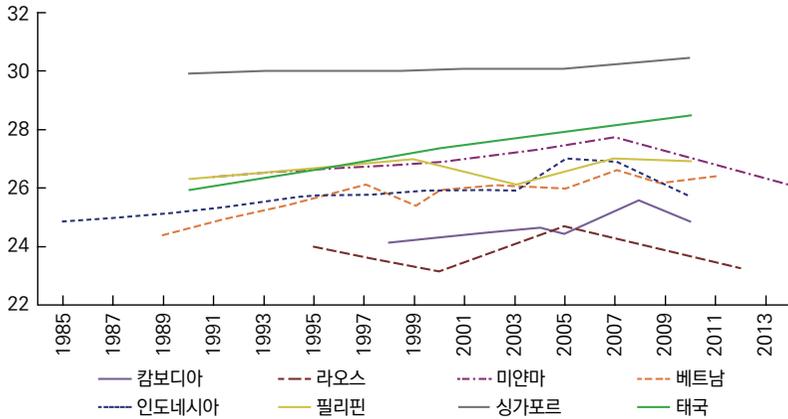
74) 캄보디아의 경우, 이혼향도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 피임의 보급, 그리고 양육비 증가가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임. 캄보디아의 이혼향도 현상은 197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도시인구 비율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음. Eleanor Hukim, "Cambodia's Fertility Transition: The Dynamics of Contemporary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0, no. 4 (2014), p. 612; 베트남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2명의 자녀를 이상적인 자녀 수로 제시했음. 그러나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달리 인구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으며, 본인의 호적이 있는 지역에서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혼향도 현상을 관찰하기 어려움. 조영태·전 명 뚜언·응우옌 쉐언, 『2020-2040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 (서울: (주)북스톤, 2019), p. 55.

라. 결혼 및 가족계획

동남아 국가의 초혼 평균 연령은 동유럽 사례와는 달리 상승 또는 하락의 패턴을 찾기 힘들다. 이는 남녀와 상관없이, 그리고 다른 동

〈그림 IV-13〉 동남아 주요 국가의 초혼 평균 연령(남(上), 여(下))

(단위: 나이)



주: Mean age at first marriage, male(上), Mean age at first marriage, female(下)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남아 비체제전환의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체제 전환이 이들 국가의 결혼 및 가족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의 경우 비체제전환 그룹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개별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여 체제전환 여부에 따라 그룹화하기 어렵다.

마.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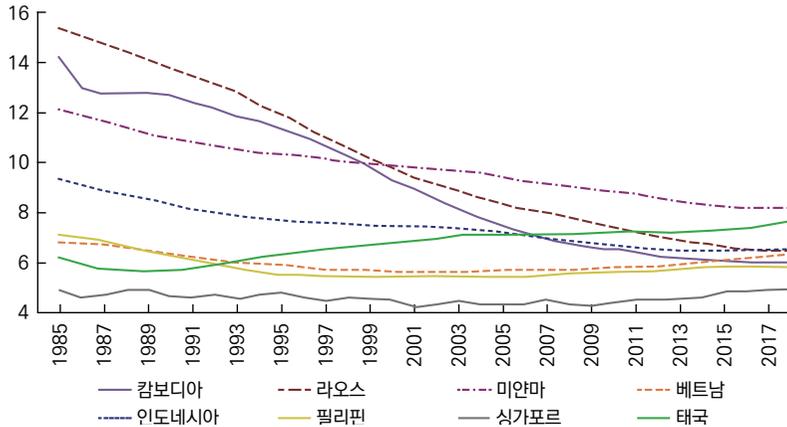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사망률은 체제전환 기간 동안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에는 10% 이하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들 국가의 사망률은 비체제전환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비체제전환국가와의 격차도 빠르게 감소하였다. 한편, 베트남의 사망률은 변화가 거의 없다.⁷⁵⁾ 비체제전환 국가 중에서는 태국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이 특이점이다.⁷⁶⁾

75) 베트남의 사망률의 수준에 대해 진단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Stephen et al.(2015)에서는 베트남의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병상 수가 원인이라고 추론한다. Stephen Gaskill and Nguyen Luong Hien, "The Vietnamese Healthcare Industry: Moving to the Next Level," PwC Report (2015), p. 2, <<http://www.pwc.com/vn/en/advisory/deals/assets/the-vietnamese-healthcare-industry-moving-to-next-level-pwc-vietnam-en.pdf>> (Accessed October 16, 2020).

76) 2012년 기준으로 태국 사망자 수의 60%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임. 이는 태국 사회가 고령화되어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이 많아진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태국의 사망자 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Pramote Prasartkul and Patama Vapattanawong, "Morbidity and Mortality," *Thai Health*, Health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Office (2012), p. 14.

〈그림 IV-14〉 동남아 주요 국가의 사망률 비교

(단위: 1,000명)



주: Death rate, crude (per 1,000 peopl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7, 2020).

바. 인구 이동(순이민자 수)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커지고 해외 이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가 더 많아지면 인구 유출이 촉진된다. 싱가포르와 태국을 제외한 동남아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인구 유출을 경험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동남아 주요 체제전환국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체제전환 이후 경제적 기회를 찾아 선진국과 주변국으로의 인구가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⁷⁷⁾

실제로 이들 국가의 인구는 주로 태국과 미국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국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캄보디아는 1992~1997년 순이민자 수가 분석 기간 중 유일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77) 아세안 국가들은 서로 국경을 통과하기 쉬우며, 많은 동남아 근로자들이 태국이나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근무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음.

〈표 IV-2〉 동남아 주요 국가의 순이민자 수 비교

(단위: 명)

		1987	1992	1997	2002	2007	2012	2017
동남아 CLMV 체제 전환국	캄보디아	-78.0	409.4	348.5	-35.2	-296.0	-150.0	-150.0
	라오스	0.1	-60.6	-134.7	-148.1	-110.3	-112.3	-73.5
	미얀마	-200.0	-713.7	-538.0	-1208.1	-1336.9	-528.2	-816.6
	베트남	-332.3	-394.2	-216.0	-651.0	-800.0	-400.0	-400.0
동남아 비체제 전환국	인도네시아	261.3	-35.4	-67.7	-1149.7	-1333.7	-454.4	-494.8
	필리핀	-314.7	-698.9	-949.3	-1244.4	-1548.1	-834.6	-335.8
	싱가포르	119.8	297.8	321.6	92.8	721.3	317.0	135.1
	태국	504.4	-607.5	715.8	373.7	59.0	167.3	97.2

주: 1. 순이민자 수(Net migration)

2. 음영은 순이민자수가 음의 수인 경우, 즉 인구가 유출된 경우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5, 2020).

이는 크메르루주를 피해 망명 생활을 하던 캄보디아인들이 新정권 수립 후 고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나머지 기간에도 인구 유출이 지속되었는데 이들의 주요 종착지는 태국과 미국으로 나타났다. 태국과 미국으로의 인구 유출 현상은 라오스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의 경우에도 태국과 말레이시아로의 인구 유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태국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근원지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순으로 이들 국가 간의 노동력 이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의 인구 유출은 다른 체제전환국가와는 달리 대부분 미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와 같이 서양 선진국으로 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⁷⁸⁾ 한편, 싱가포르로 유입되는

78) 체제전환 초기에는 태국과 미국으로의 이주가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출발한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태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Population Pyramid, <<http://www.populationpyramid.net/migrants/en/cambodia/2013/>> (Accessed October 16, 2020).

인구는 대부분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온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구 이동은 체제전환으로 인한 국가간 이동의 자유가 주변국으로의 상당한 인구 유출을 야기하였음을 보여준다.

3.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요인 분석

가. 일반적 요인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는 ① 출생률, ② 사망률, ③ 순이민자 수의 영향을 받는다. 동남아 체제전환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긴 하였으나 체제전환 이전 출산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체제전환 기간에 경제성장에 유리한 인구구조(생산가능인구가 증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최근에 와서야 베트남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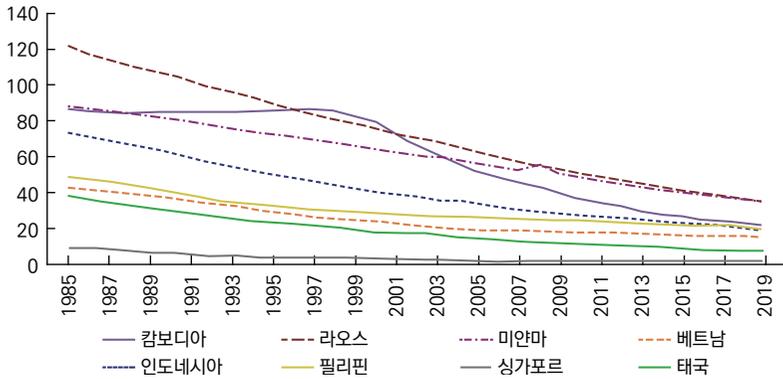
〈그림 IV-14〉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의 꾸준한 사망률 감소는 이들 국가의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영아 사망률과 기대수명은 사망률과 비슷한 경로로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영아 사망률은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할지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영아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률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한, 인구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영아 사망률은 동남아 8개국에서 모두 감소하는데, 〈그림 IV-15〉에 따르면, 체제전환국의 영아 사망률 하락 속도가 비체제전환

국에 비해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제전환국의 1980년대 영아 사망률은 비체제전환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들 간의 격차가 감소하였다.

〈그림 IV-15〉 동남아 주요 국가의 영아 사망률 비교

(단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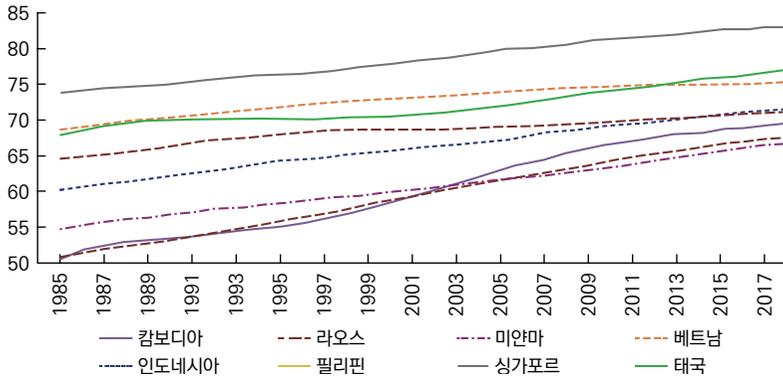


주: Mortality rate, infant (per 1,000 births)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2, 2020).

〈그림 IV-16〉 동남아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비교

(단위: 나이)



주: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4, 2020).

기대수명 통계도 영아 사망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동남아 8개국의 기대수명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와중에 체제전환국의 기대수명 증가율이 비체제전환국에 비해 다소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한편, 순이민자 수의 변화를 패턴화하기 어려웠던 동유럽 사례와 달리 동남아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주변국으로의 유출이 이들 국가의 인구구조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들 국가 인구구조의 초기 조건이 절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이들 국가의 인구구조를 악화시키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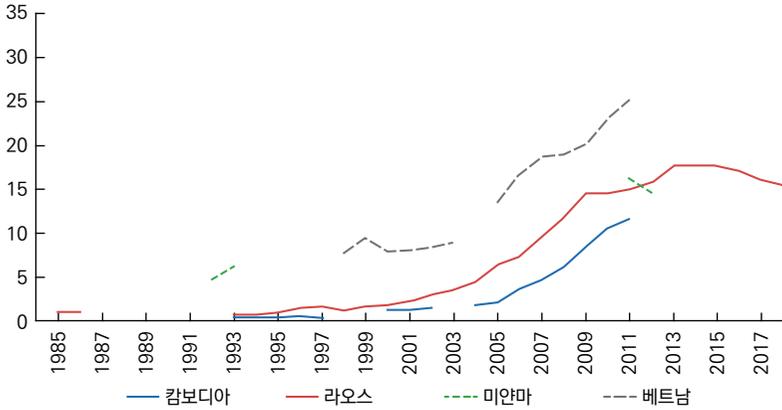
나. 사회경제적 요인

동유럽 체제전환국가와 달리 동남아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으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비교적 덜 겪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동유럽의 사례와 달리 체제전환 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요인들이 동남아 체제전환국에 미친 영향을 다른 요인들의 영향과 구분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체제전환의 결과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으며, 이러한 경제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여권 신장, 여성의 교육 참여율 상승,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 상승 등을 야기하여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림 IV-17>에 따르면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여성 교육 참여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 IV-18>에 따르면 체제전환 기간 동안 이들 국가에서 여성의 서비스업 참여율 또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교육 참여율과 여성의 서비스업

〈그림 IV-17〉 동남아(CLMV) 국가들의 여학생(高) 등록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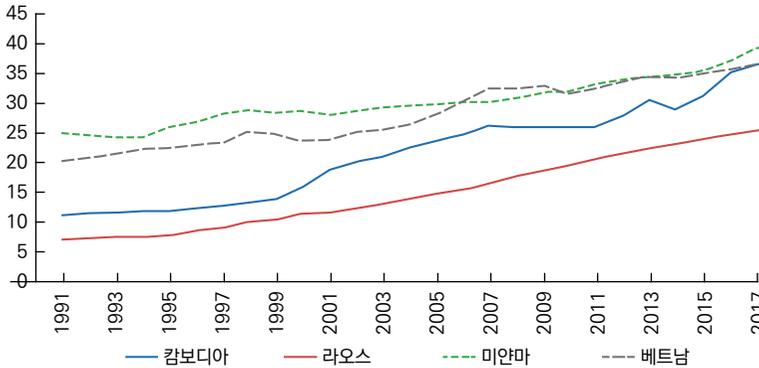


주: School enrollment, tertiary, female (% gross)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3, 2020).

〈그림 IV-18〉 동남아(CLMV) 국가들의 여성 서비스업 참여율

(단위 %)



주: Employment in services, female (% of female employment) (modeled ILO estimat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3,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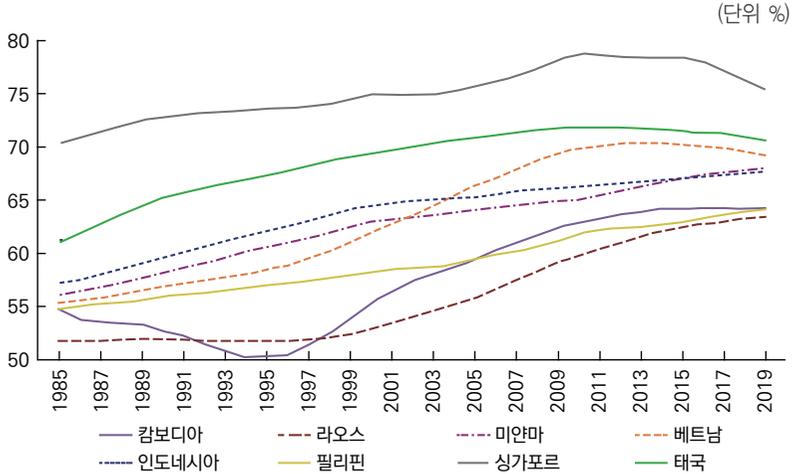
참여율 증가는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는 출산율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통계의 추이에서만 보면 이들 요인이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출생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인구의 변화(고령화)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생산가능인구 점유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면, 캄보디아는 1995년까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캄보디아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하는데, 앞서 살펴보면 청년층이 밀집된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 양상과 일맥상통한다. 라오스와 미얀마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생산가능인구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13년에 최고점을 찍었으며 최근에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베트남에서의 인구배당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인구 피라미드가 중형으로 바뀌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노년부양비율을 살펴보면, 동유럽 사례와 달리 동남아 체제전환국에서는 체제전환 기간 동안 노년부양비율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와서야 증가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남아의 노년 인구 점유율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절대적인 수치가 아직까지는 낮다.

〈그림 IV-19〉 동남아 주요 국가의 생산가능인구 점유율 변화



주: Population ages 15-64 (% of total population)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ne 23, 2020).

〈표 IV-3〉 체제전환국의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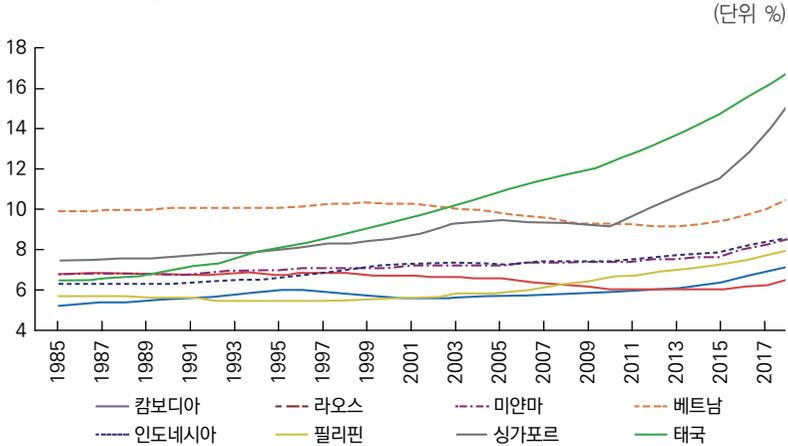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동남아 CLMV 체제 전환국	캄보디아	2.7	2.8	2.9	3.0	3.1	3.4	3.7	4.1
	라오스	3.5	3.6	3.5	3.5	3.6	3.7	3.7	3.8
	미얀마	3.7	3.8	4.0	4.3	4.5	4.6	4.8	5.2
	베트남	5.3	5.5	5.7	5.9	6.4	6.5	6.5	6.7
동남아 비체제 전환국	인도네시아	3.6	3.6	3.8	4.1	4.7	4.8	5.0	5.4
	필리핀	3.2	3.2	3.1	3.1	3.3	3.5	4.1	4.6
	싱가포르	4.7	5.3	5.6	5.9	6.4	7.2	7.3	9.0
	태국	3.7	4.0	4.5	5.5	6.5	7.8	8.9	10.6

주 1. Population ages 65 and above (% of total population)

2. 음영은 처음으로 양의 증가를 보인 년도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16, 2020).

〈그림 IV-20〉 동남아 주요 국가의 노년부양비율 비교



주: Age Dependency Ratio, old (% of working age population)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July 2, 2020).

4. 소결

본 장에서는 점진적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남아 국가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동남아 체제전환의 특징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충격 없이 점진적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국가는 체제전환 이후 높은 경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보이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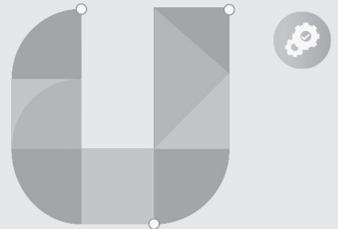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2010년까지 피라미드형이 유지되거나 중형 구조적 변화를 보였으며, 아주 최근에 와서야 베트남과 미얀마가 방추형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인구 증가율 또한 꾸준히 양의 값을 보이고 있어 체제전환 이후에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출산율과 출생률은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체제전환 이전에는 주변국가보

다 대체로 높은 출산율과 출생률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주변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는 이들 국가의 초기 조건, 즉 출산율이 체제전환 이전에 절대적으로 높아서일 수도 있고, 체제전환이 이들 국가의 출산율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주변국가의 수준으로 빠르게 수렴해간다는 것은 동구권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다. 한편, 동구권과 달리 동남아 체제전환국에서는 사망률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주변국으로의 인구유출도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체제전환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긴 하였으나 체제전환 이전의 절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사망률 하락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오히려 유리한 인구구조(생산가능인구가 증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량적으로 경제 성장과 체제전환의 효과를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다는 점에서 결국 체제전환 → 경제 성장 → 인구구조 변화의 경로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아직까지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다만, 최근 베트남의 경우 인구황금기를 맞으면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있지만,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급속한 도시화, 핵가족화 등 다수 국가들의 인구구조 변화추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V.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의 상관관계



1. 체제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의 상관관계 분석

이 절에서는 동유럽과 동남아 인구구조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동유럽 체제전환국으로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을 고려하였고,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4개국을 고려하였다. 방법론으로는 통계 분석을 주요하게 사용하였고, 경우에 따라 회귀분석 결과도 첨부하였다. 다만, 회귀분석 결과의 경우, 연구 기간의 제약 상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회귀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바라며, 분석 결과의 안정성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1인당 GDP를 보면, 전체적으로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1인당 GDP가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1인당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체제전환 초기 5년(1990~1995년) 동안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1인당 GDP는 소폭 감소한 반면,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최소 15% 이상 증가하였다.

〈표 V-1〉 동남아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실질) 1인당 GDP 변화

(단위: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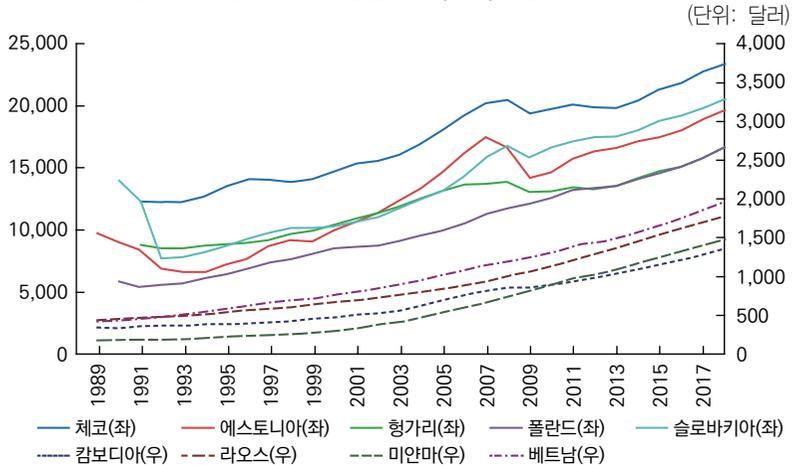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캄보디아	1인당 GDP	341	393	486
	증가율	-	15.1	23.8
라오스	1인당 GDP	462	548	673
	증가율	-	18.6	22.8
미얀마	1인당 GDP	191	229	304
	증가율	-	19.9	32.7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베트남	1인당 GDP	433	583	765
	증가율	-	34.6	31.2
체코	1인당 GDP	13,989	13,463	14,807
	증가율	-	-3.8	10.0
에스토니아	1인당 GDP	9,154	7,213	10,018
	증가율	-	-21.2	38.9
헝가리	1인당 GDP	8,857	8,958	10,465
	증가율	-	1.1	16.8
폴란드	1인당 GDP	5,947	6,540	8,526
	증가율	-	10.0	30.4
슬로바키아	1인당 GDP	13,989	8,732	10,321
	증가율	-	-37.6	18.2

주: 헝가리는 1990년 1인당 GDP(실질)의 자료가 없어 1991년 자료로 대체함.
2010년 미국을 기준으로 한 실질 1인당 GDP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17, 2020).

〈그림 V-1〉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실질) 1인당 GDP 비교



주: 2010년 미국을 기준으로 한 실질 1인당 GDP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17, 2020).

총인구 변화를 보면, 체제전환 초기 10년(1990~2000년) 동안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거나 2% 이내로 소폭 증가한 반면, 동남아 체제전환 국가들은 5%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다. 제Ⅱ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동남아와 동유럽의 인구변화 차이는 소득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인구전이론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구 증가율이 높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증가율이 낮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표 V-2〉 동남아와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인구 변화 비교

(단위: 만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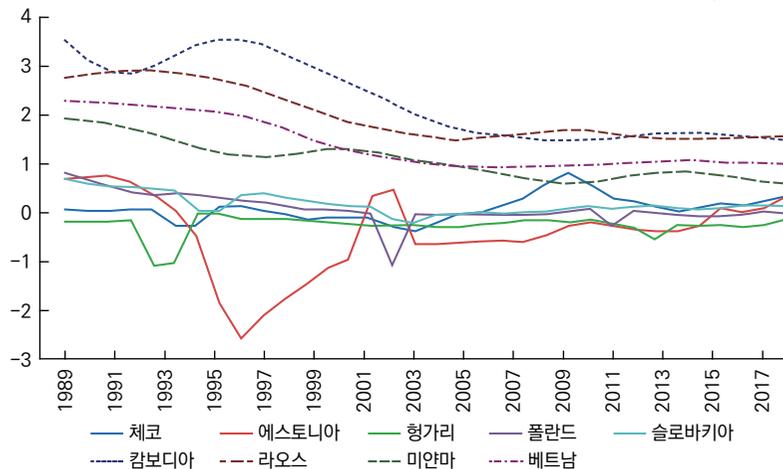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캄보디아	인구	898	1,066	1,216
	증가율	-	18.7	14.1
라오스	인구	426	485	532
	증가율	-	13.8	9.8
미얀마	인구	4,134	4,390	4,672
	증가율	-	6.2	6.4
베트남	인구	6,799	7,491	7,991
	증가율	-	10.2	6.7
체코	인구	1,033	1,033	1,026
	증가율	-	-0.1	-0.7
에스토니아	인구	157	144	140
	증가율	-	-8.4	-2.8
헝가리	인구	1,034	1,033	1,021
	증가율	-	-0.4	-1.1
폴란드	인구	3,811	3,859	3,826
	증가율	-	1.3	-0.9
슬로바키아	인구	530	536	539
	증가율	-	1.2	0.5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17, 2020).

인구 증가율의 변화를 체제전환 기간과 연계하여 분석해보면,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그림 V-2〉).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경우,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체제전환 직후에는 음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어 양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Ⅲ장에서 소개한 라트비아, 아르메니아 등 일부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직후에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2000년까지 하락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체제전환 자체가 인구구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경우 1990년을 전후하여 인구증가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고 하락세가 2000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만 보면 동남아의 인구 증가율 감소가 체제전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 성장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V-2〉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인구 증가율 비교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17, 2020).

체제전환 초기 10년(1990~2000년) 동안 출생률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동유럽은 체제전환 초기 10년 동안 출생률이 감소하였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된 반면, 동남아는 출생률이 1990년을 전후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감소하고 있다(<그림 V-3>). 동유럽 체제전환국 중 변화폭이 큰 지역은 슬로바키아로 1990년 출생아 수가 15명에서 1995년 12명, 2000년 다시 10명으로 감소하였고, 동남아 체제전환국 중 변화폭이 큰 나라는 캄보디아로 1990년 42명, 1995년 34명, 2000년 28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체제전환은 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⁷⁹⁾ 체제전환을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대비 출생률이 약 30% 감소(모델(3)의 dummy: 체제전환 참조)하였다. 출생률이 고령화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것은 출생률이 궁극적으로 고령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출산율이 감소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출생률 감소는 노동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출생률 감소와 노동가능인구 감소는 상대적인 속도를 비교해봐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유소년부양비(14세 이하 인구 ÷ 15~64세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체제전환은 고령화 촉진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체제전환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확대(모델(3)의 실업률의 증감율)도 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제Ⅱ~Ⅳ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자녀 출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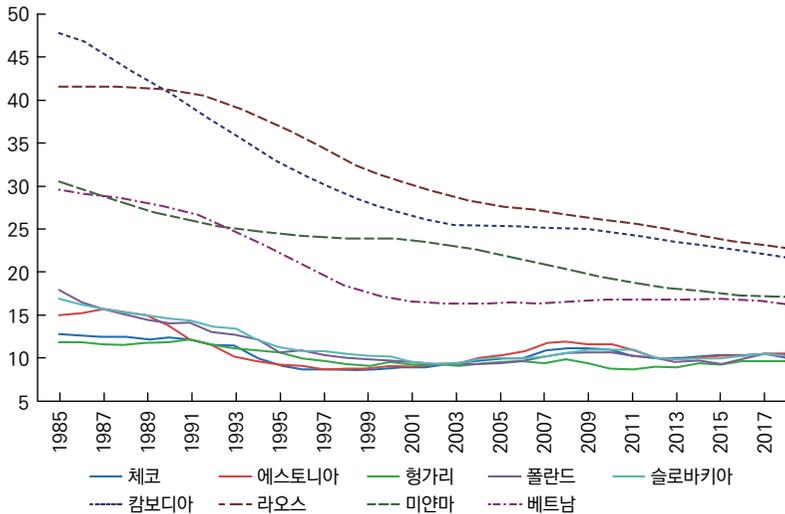
79) 회귀분석 결과는 첨부1의 1.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참조.

선행연구와 달리 여성의 초혼연령 증가는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동남아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 외 여성대학진학률이나 여성고용률은 출생률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규모는 1인당 GDP와 유럽 더미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인 경제규모(GDP)는 출생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1인당 GDP)은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또, 유럽 지역 국가들의 출생률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 매우 낮았는데(dummy: 유럽 참조), 이는 유럽 국가들의 사회·경제·문화적인 특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3〉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출생률 비교

(단위: 1,000명당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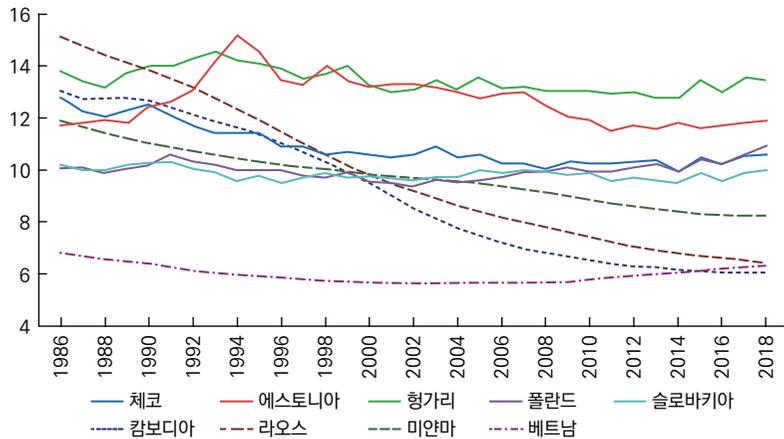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5, 2020).

노동가능인구 비중이나 도시인구 비중은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노동가능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인구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도시인구 비중은 보건환경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체제전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유럽 일부 국가(에스토니아, 헝가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에서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 변화를 보다 자세하기 보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체제전환 초기 5년(1990~1995년) 동안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한 국가는 캄보디아, 라오스, 에스토니아 등이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한 것은 순이민자 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림 V-4〉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비교

(단위: 1,000명당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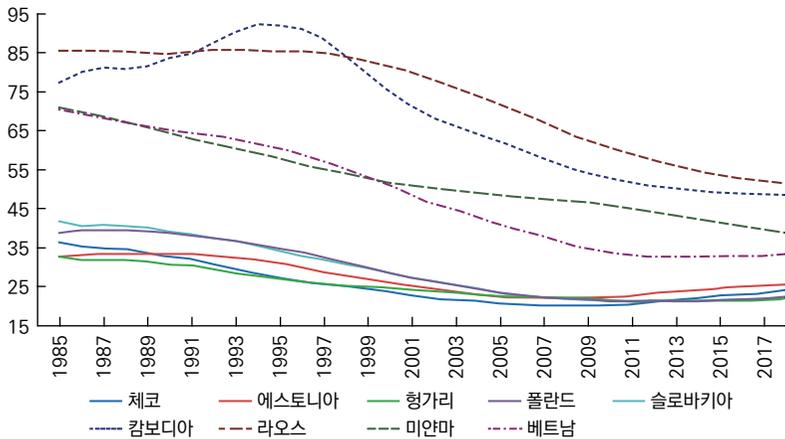
주: 인구 증가율(Population Growth)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5, 2020).

유소년 부양 비율(14세 이하 인구/ 15~64세 인구)의 감소는 체제 전환 초기 10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었다(〈그림 V-5〉). 유소년 부양 비율 감소는 대부분의 동유럽 체제전환국에서 관찰되었으며, 동남아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제외하고 미얀마와 베트남에서 관찰되었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체제전환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였는데, 전쟁 이후 나타난 베이비붐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후술하겠으나 유소년 인구 감소는 체제전환 이후 동남아의 고령화 비중((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이 감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V-5〉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유소년 부양 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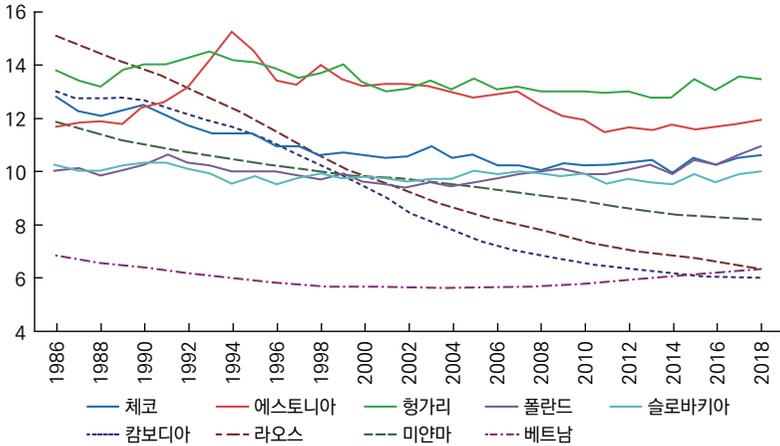
주: 유소년 부양 비율 = 14세 이하 인구/15~64세 인구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17, 2020).

사망률은 체제전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그림 V-6〉). 동유럽은 체제전환 초기 10년 동안 사망률이 거의 변화하지 않은 반면, 동남아는 체제전환 초기 10년 동안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그림 V-6〉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사망률 비교

(단위: 1,000명당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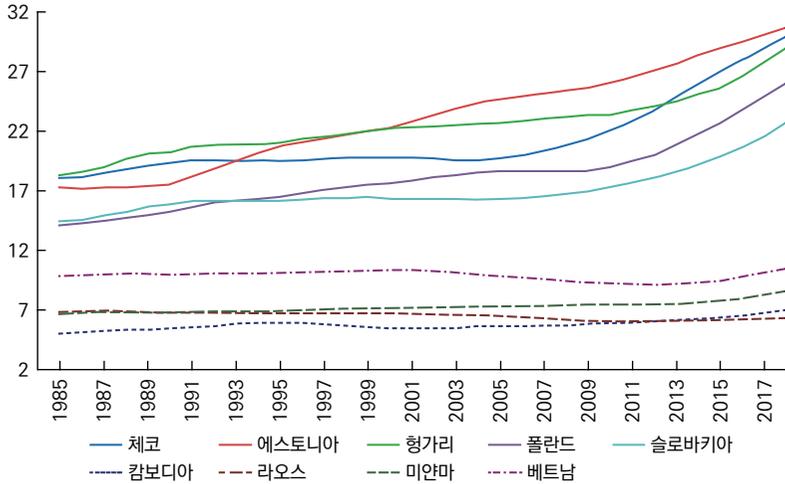
주: 인구 증가율(Population Growth)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5, 2020).

노령자 부양 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체제전환 초기 10년 동안 동유럽 체제전환국에서만 소폭 증가하였으며,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동유럽 체제전환국에서는 평균 10% 수준이던 노령자 비중이 1995년 17%, 2000년 18%로 체제전환 초기 5년 동안 빠르게 증가한 반면, 동남아 체제전환국은 1990년 평균 7%, 1995년 7%, 2000년 7%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림 V-7〉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노령자 부양 비율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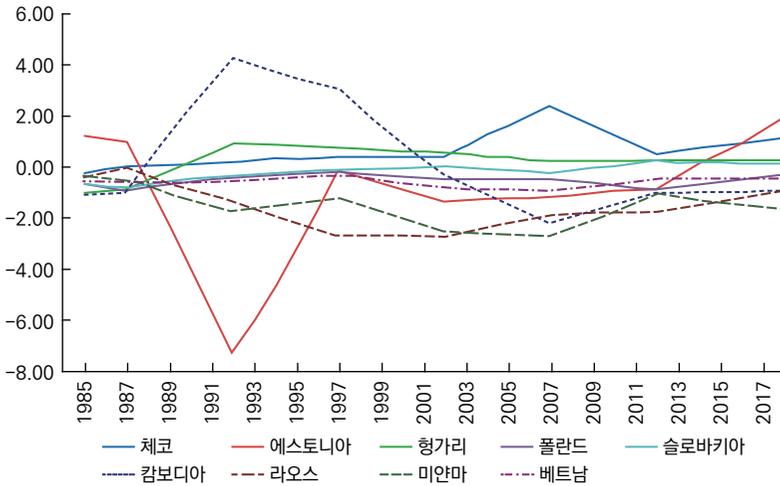
주: 노령자 부양 비율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5, 2020).

순이민자 수는 체제전환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사회·경제적 조건과 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8〉을 보면 체제전환을 전후하여 별다른 경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 순이민자 비중은 동유럽보다 동아시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순이민자는 주로 태국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체제전환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V-8〉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의 순이민자 비중 비교

(단위: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Accessed October 5, 2020).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은 출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체제전환과 더불어 불확실성의 확대(실업률의 증감을 확대)도 출생률 감소로 이어졌다. 출생률의 감소는 단기적으로 유소년부양비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고령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1인당 GDP의 증가는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크기는 무시할 수준으로 작았다. 그러나 선진국이 많은 유럽지역 국가들의 출생률이 동남아 국가에 비해 낮았으므로 사회·문화적인 차이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체제전환은 이민자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제Ⅲ~Ⅳ장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종합해보면, 체제전환은 그 유형과 관계없이 인구구조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 경제 통합에 대한 정책적 제언

한국은 2000년대 이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017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전환되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 감소폭이 가장 큰 한국의 경우 2026년에는 노년층이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만간 총인구 규모도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지속적 악화 때문에 당분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기술혁신으로 일정 정도 경제적 부담은 완화할 수 있겠지만, 부양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소비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인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남북통합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통합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체제로의 전환과 한반도 상황 변화에 따른 남북통일방식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동유럽과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체제전환의 방식과 속도가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경제·사회적 여건과 상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체제전환의 방식과 이행의 속도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경우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는 남한 경제는 물론 인구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급진적 개혁을 통해 정치·사회적 변동을 겪은 동유럽의 경우 출산율은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혼인과 출산을 연기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 결혼과 출생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서는 경제구조조정, 여성의 노동

참여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등의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낮은 출산율은 기존의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가 해체되고, 충격요법에 따라 경기 침체·고용 불안정, 개인주의의 확산과 여성 임금(육아의 기회비용)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동유럽은 체제전환 이후에 고령화가 촉진됐고, 일부 국가에서는 인구수도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에 미친 일반적·사회적 요인 외에도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구소련 지역 국가들이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보다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동유럽·구소련의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체제전환 국가의 인구구조는 서유럽 국가의 구조에 빠르게 수렴하였으며, 고령화 문제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의 인구구조도 체제전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동남아는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어서 체제전환이 인구구조에 미친 영향이 동유럽처럼 급진적이지 않았다. 전형적인 농업국가인 CLMV의 경우 정치적 안정 하에 경제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체제전환’과 ‘경제개발’이 중첩되면서⁸⁰⁾ 경제성장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인구구조도 피라미드 형태에서 종형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해 왔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최빈개도국(LDCs)으로서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고, 베트남은 2008년 GDP가 천 달러를 넘어서며 중소득국(MICs)으로 진입하였다.⁸¹⁾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외자에 기반한 수출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개발과

80) 체제전환국의 이행과 개발의 중첩성 문제에 대해서는 권율,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제8권 1호 (1999), pp. 12~17 참조.

81) 권율·김미림,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24호 (2018), p. 11 참조.

공업화를 이룩해 왔다. 베트남은 2010년 이후 인구성장률이 1%를 기록하고 평균 출산율은 2.09명으로 2019년 총인구는 9,727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정체하면서 2011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30년 이전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동안 동남아 CLMV는 노년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거의 일정하였으나, 유소년부양비율(14세 이하 인구/15~64세 인구)은 가파르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출산율 하락 때문이었으며, 개혁개방정책 이후 인구배당효과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인구황금기를 맞으면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고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있지만,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급속한 도시화, 핵가족화 등 다수 국가들의 인구구조 변화추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유럽과 동남아의 체제전환국 사례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성장은 인구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인구 고령화(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가 촉진된다. 기본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는 사망률 변화와 출생률 변화로 설명 가능한데,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망률은 소폭 줄어드는 데 반해, 출생률은 대폭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면 고령화가 촉진된다. 동유럽이나 구소련의 경우와 같이 급진적 개혁으로 정치·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면 출산율/출생률 저하 혹은 인구유출입으로 인한 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동구권과 달리 동남아 체제전환국에서는 사망률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주변국으로의 인구유출도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남아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긴 하였으나 체제전환 이전의 절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사망률 하락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

로 오히려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제Ⅴ장의 정량적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인구구조는 경제성장과 연관이 있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록 출생률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고령화가 촉진된다. 또, 제Ⅱ~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확대(실업률 증가)도 출생률 감소로 이어졌다. 이를 정성적 분석 결과와 종합해보면, 체제전환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유럽은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 위축, 동남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 성장이라는 상이한 경로로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소득수준으로는 동남아와 유사하나, 90년대 이전 이미 인구학적 이행이 완료되어 향후 개혁·개방을 시행하더라도 인구배당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이 통합될 경우 북한의 출산율과 15세 미만 유소년 비율이 다소 높아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다소 늦추고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인구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고난의 행군 시절 출생한 40대 전후 중간관리인력 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협력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 국가들이 체제전환 기간 동안 보인 인구구조 변화의 차이를 체제전환 방식과 속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와 제약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동유럽과 동남아 체제전환국 간의 경제구조 및 발전단계의 차이, 개혁개방정책의 초기조건 등에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⁸²⁾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의 성숙도와 공업화 발전

82) 권율, “체제전환모델과 북한개발협력,” 손혁상 외, 『북한 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단계가 동남아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도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인구학적 이행에서 상이한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비율 하락이라는 인구학적 추세는 저출산율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결과이지만, 체제전환의 방식이나 속도에 따라 인구구조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국별 분석과 정량적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국별, 지역별 출산율과 사망률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명확히 분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동유럽은 체제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출산율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혼·양육의 기회비용, 소득수준의 불확실성이 커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불확실성의 확대(급격한 체제전환)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지 보다 심층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보이는 적절한 변수를 규명하지 못하였는데, 체제전환 시기로서 관련 통계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동구권 국가들의 인구구조는 체제전환을 기점으로 빠르게 악화되는 양상이었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급진적 체제전환에서 기인한 것인지, 체제전환 자체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인구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남북 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 경제통합에도 중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한의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미흡하였고,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량적 분석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실제』(서울: 오름, 2017), pp. 269~270 참조.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성철·김영운·오승렬·임강택·조한범. 『북한의 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 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신윤정. 『동유럽 국가의 저출산 및 가족 정책 현황과 시사점』.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유호열 외. 『통일한국 대전략 연구: 동유럽 체제전환과 사회통합 경험을 바탕으로』. 성남: 세종연구소, 2012.
- 이상립.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이은구. 『경제전환기 중·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이재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9.
- 장 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2019.
- 조영태·전 명 뚜언·응우옌 쑤언. 『2020-2040 베트남의 정해진 미래』. 서울: (주)북스톤, 2019.
- 최장호·최유정·김범환·임수호.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 최장호·최유정·한하린.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가 북한에 갖는 함의』.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출판예정.
- Becker, Gary.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Blanchard, Olivier Jean, Kenneth A. Froot, and Jeffrey D. Sachs. *The Transition in Eastern Euro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 Mason, Andrew (ed.). *Population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challenges met, opportunities seized*.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Rothembacher, Franz. *The Central and East European Population since 1850*.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3.

2. 논문

- 권 율.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제8권 1호, 1999.
- _____. “체제전환모델과 북한개발협력.” 손혁상 외. 『북한 개발협력의 이해: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2017.
- 권 율·김미림. “베트남 개혁모델이 남북경협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24호, 2018.
- 김민관. “동유럽 주요국의 경제체제전환 과정: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를 중심으로.” 『산은조사월보』. 2007년 2월호, 2007.
- 이형석. “동유럽 체제전환의 對韓 시사점.” 『INSS 전략보고』. 제2018-33호, 2018.
- 최지영. “통일과 고령화.” 『경제연구』. 제2017-24호, 2017.
- Allman, James, Vu Qui Nhan, Nguyen Minh Thang, Pham Bich San, and Vu Duy Man.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Vietnam.”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 22, no. 5, 1991.
- Baker, Gary and H. Gregg Lewi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 Economy*. vol. 81, no. 2, 1973.
- Bhaumik, S. K. and J. B. Nugent. "Does Economic Uncertainty Affect the Decision to Bear Children? Evidence from East and West Germany." IZA Discussion Paper. no. 1746, 2005.
- Bloom, David E. and Jeffrey G. Williamson. "Demographic transitions and economic miracles in emerging Asia."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2, no. 3, 1998.
- Brainerd, Elizabeth. "The Demographic Transformation of Post-Socialist Countries: Causes, Consequences, and Questions." *Economies in Transition*, WIDER Working Paper Series wp-2010-015, 2010.
- _____. "Women in Transition: Changes in Gender Wage Differentials in Eastern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4, no. 1, 2000.
- Chabé-Ferret, Bastien and Paula Eugenia Gobbi. "Economics Uncertainty and Fertility Cycles: The Case of the Post-WWII Baby Boom." ECARES Working Papers. no. 2018-19, 2018.
- Denizer, Cevdet, Alan Gelb, Stoyan Tenev, and Marthat de Melo. "Circumstance and choice: the role of initial conditions and policies in transition econom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1866, 1997.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y." special report. no. 4, 2005.
- Falchetti, Elisabetta, Martin Raiser, and Peter Sanfey. "Defying the Odds: Initial Conditions, Reforms, and Growth in the First Decade of Transition."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 vol. 30, no. 2, 2002.
- Fernihough, Alan. "Human Capital and the Quality–Quantity Trade–off During the Demographic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22, no. 1, 2017.
- Ferrara, Agostino, Luca Salvati, Claudia Becagli, and Giada Bertini. "Beyond the Modernization Theory: Socio–Demographic Changes, Economic Structure and Forest Transition in a Multi–Dimensional Time–Series Analysis for Italy."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2, no. 11, 2014.
- Gaskill, Stephen and Nguyen Luong Hien. "The Vietnamese Healthcare Industry: Moving to the Next Level." PwC Report, 2015.
- Hondroyiannis, George. "Fertility Determinants and Economic Uncertainty: An Assessment Using European Panel Data."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vol. 31, no. 1, 2010.
- Hukim, Eleanor. "Cambodia's Fertility Transition: The Dynamics of Contemporary Childbearing."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0, no. 4, 2014.
- Klasen, S. and A. Launov.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Decline in the Czech Republic."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19, no. 1, 2006.
- Li, Xing, Zeguang Li, and Man–Wah Luke Chan. "Demographic Change, Savings,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The Chinese Economy*. vol. 45, no. 2, 2012.
- Martha de Melo, Cevdet Denizer, and Alan Gelb. "From Plan to Market: Patterns of Transi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564,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Washington, D.C. Processed, 1996.

- Mason, Andrew. “Demographic Transition and Demographic dividend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2005.
- Osili, U. O. and B. T. Long. “Does Female Schooling Reduce Fertility? Evidence from Nigeri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87, no. 1, 2008.
- Perelli-Harris, Brienna. “The Path to Lowest-Low Fertility in Ukraine.” *Population Studies*, vol. 59, no. 1, 2005.
- Perlitz, Manfred, Lasse Schulze, and Christina B. Wilke.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Management implications.” *Journal of East European Management Studies*, vol. 15, no. 2, 2010.
- Podkaminer, Leon. “Development Patterns of Central and East European Countries (in the course of transition and following EU accession).” wiiw Research Report, no. 388, 2013.
- Ranjan, Priya. “Fertility Behaviour under Income Uncertainty.”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vol. 15, no. 1, 1999.
- Sachs, J., C. Zinnes and Y. Eilat.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Economic Reform in Transition Economies: 1990–1998.” Systemic Transformation in Transition economies, I, CAER II Discussion Paper 61, 2000.
- Sobotka, Tomas. “Re-Emerging Diversity: Rapid Fertility Chang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s.” *Population(English Edition) 2003*, vol. 58, no. 4/5, 2003.
- Sobotka, Tomas et al.. “Czech Republic: A rapid transformation of fertility and family behaviour after the collapse of state socialism.” *Demographic Research*, vol. 19, no. 14, 2008.

Prasartkul, Pramote and Patama Vapattanawong. “Morbidity and Mortality.” *Thai Health*. Health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Office, 2012.

3. 기타 자료

『조선일보』.

법무부 <<http://www.moj.go.kr>>.

미국 통계청 <<http://www.census.gov/>>.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

Health Information System Development Office <<https://www.hiso.or.th/en/>>.

OECD Data <<http://data.oecd.org/>>.

Population Pyramid <<http://www.populationpyramid.net>>.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ynamics <<https://population.un.org/w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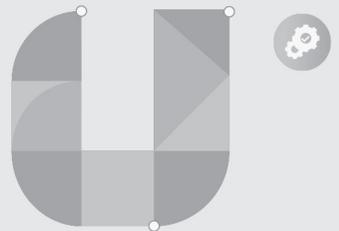
Worldometer <<http://www.worldometers.info/>>.

World Bank <<http://databank.worldbank.org/>>.

Asian Development Bank, “Country Economic Review: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ugust 2001).” Asian Development Bank, LAO 2001–11, 2011.

Asian Development Bank, “Support for Myanmar’s Reforms for Inclusive Growth Program, Reports and Recommendations of the President: Sector Assessment: Macroeconomic Assessment.” Asian Development Bank, ADB project 46372–001, 2012.

부록: 회귀분석 결과



1.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

□ 회귀분석식(pooled-regression model)

$$\bullet dr_{it} = a + econ_{it-1} + female_{it-1} + demographic_{it-1} \\ + dr_{it-1} + tran_{it} + eu_i + d_i + d_{sc} + d_t + e_{it}$$

- dr_{it} 은 국가 i 의 t 년 출생률(여성 1,000명당 신생아 수)

- a 는 상수(constant)

- $econ_{it-1}$ 은 경제관련 변수-GDP(실질, 2010년 미국=100),
인당 GDP(실질, 2010년 미국=100), 실업률의 변동폭(=실
업률 $_t$ - 실업률 $_{t-1}$)

※ t 가 아닌 $t-1$ 을 사용한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 $female_{it-1}$ 은 여성 관련 변수-여성초혼연령, 여성 대학
진학률, 여성고용률

- $demographic_{it-1}$ 은 인구관련 변수-노동가능인구 비중(=
15~64세 인구÷전체인구), 도시화율(=도시거주인구÷전체
인구)

- dr_{it-1} 은 국가 i 의 $t-1$ 년 출생률

- $tran_{it}$ 은 체제전환 더미(dummy, 체제전환기간=1, 그 외는
0)

- eu_i 는 유럽지역 더미(유럽지역 국가=1, 그 외는 0)

- d_i 는 국가 더미-국가마다 사회·경제적 특징이 다를 것으로
예상. 국가 더미를 사용하여 국가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

- d_t 는 년도 더미-매년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을 통제

- d_{sc} 는 경제위기 더미-2개의 더미를 부여하였는데, 하나는 동아시아 경제위기(1998년 이후=1, 1997년 이전=0), 리먼 브라더스 사태(2009년 이후=1, 2008년 이전=0)
- e_{it} 는 오차항

□ 분석 기간: 1992~2018년

※ 가용한 자료 제약으로 1992년 이전은 분석이 불가능하였음.

□ 자료

- 국가: [동유럽] (체제전환국)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비체제전환국) 프랑스, 스페인, 영국
- [동남아] (체제전환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비체제전환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 출처: 상술한 모든 자료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활용
- 체제전환 더미: 체제전환국 중 아래의 기간만 더미 값 1을 부여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0(영)을 부여, 비체제전환국은 0(영)을 부여
 - 캄보디아(1989~2004년), 라오스(1986~2013년), 미얀마(1988~2016년), 베트남(1986~2007년)
 - 체코(1989~1995년), 에스토니아(1991~1999년), 헝가리(1990~1995년), 폴란드(1989~1995년), 슬로바키아(1989~1995년)

□ 회귀분석 결과

〈표 부록-1〉 출생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수 (출산율)	모델(1) 추정치 (표준편차)	모델(2) 추정치 (표준편차)	모델 (3) 추정치 (표준편차)
GDP(실질) $t-1$	-	-	0.0001588 (0.0001886)
인당 GDP $t-1$	-	0.0000168 (9.26e-06)	0.0000186** (8.96e-06)
실업률의 증감율 t	-	-0.0409056*** (0.0133889)	-0.0409762*** (0.132661)
여성 고용률 $t-1$	-	-	-0.0032714 (0.005285)
여성 대학 진학률 $t-1$	-	-	0.0025198 (0.002024)
여성초혼연령 $t-1$	-	0.667092*** (0.0143303)	0.68407*** (0.176082 = 3)
노동가능인구 비중 $t-1$	-	0.0386967*** (0.011624)	0.615475*** (0.143964)
도시인구 비중 $t-1$	-	0.0082727 (0.0052396)	0.105617** (0.0053553)
출생률 $t-1$	0.9486548*** (0.0093309)	0.9571914*** (0.0119093)	0.9528919*** (0.137141)
사망률 $t-1$	0.0300518 (0.0223684)	-	-0.0183546 (0.212273)
순이민자수 $t-1$	0.0729639** (0.028784)	0.0889513** (0.0313369)	0.0702203** (0.0338241)
dummy: 체제전환	-0.471994*** (0.0631509)	-0.3061552*** (0.0729011)	-0.2692423*** (0.0749229)
dummy: 유럽	-0.6893734*** (0.2579152)	-2.467595*** (0.611615)	-3.088705*** (0.7895754)
dummy: 동아시아 경제위기	0.2192775** (0.0895302)	-0.2169394** (0.0972845)	-0.3859577*** (0.1115262)

종속변수 (출산율)	모델(1) 추정치 (표준편차)	모델(2) 추정치 (표준편차)	모델 (3) 추정치 (표준편차)
dummy: 리먼브라더스 사태	-0.4366377*** (0.0867168)	-0.5986257*** (0.1260219)	-0.5845954*** (0.1115262)
dummy: 년도 dummy: 국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Constant	0.7877652*** (0.2458282)	-3.984829** (1.1038)	-3.533888*** (1.206385)
R-squared	0.9986	0.9988	0.9988
Test: Omitted Variable (Ramsey RESET Test) H0: Model has no omitted variables.	F(3,375)=4.03 Prob>F=0.0076 있음.	F(3,375)=0.66 Prob>F=0.5763 없음.	F(3,375)=1.03 Prob>F=0.3795 없음.
Observations	432		

주: 괄호 Robust standard errors. *** p<0.01, ** p<0.05, * p<0.1
자료: 저자가 상술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함.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8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현상백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19	북한 변화 실태 연구: 시장화 종합 분석	홍 민 외	20,5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외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중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중호 외	12,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	----------------------	-------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2018-04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지표와 발전방향	나용우 외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종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협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욱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운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2020-27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2	홍 민 외	13,0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환적성국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